

저출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학술대회

- ▣ 일시 : 2010. 07. 22(목), 14:00~17:00
-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주최: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원:  보건복지부

P · R · O · G · R · A · M

-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축사 김용수(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장)
- 14:10-15:30 **주제발표**
좌장 최진호(아주대학교 교수)
발표 1 **신혼집 마련과 첫 자녀 출산의 관계**
 김한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발표 2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에 관한 연구**
 김효순(가족문제연구소 소장)
 엄명용(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3 **미혼자의 일과 가족환경에 따른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과 결혼-출산정책에 대한 선호경향과 정책개발**
 정민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발표 4 **출산률 제고를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최성일(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15:30-15:40 **coffee break**
- 15:40-16:40 **토론 및 심사** 김태현(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은기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손주영(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사무관)
- 16:40-17:00 **시상식 및 폐회**

C · O · N · T · E · N · T · S

발표 1. 신혼집 마련과 첫 자녀 출산의 관계 1
김한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발표 2.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에 관한 연구..... 29
김효순(가족문제연구소 소장)
엄명용(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3. 미혼자의 일과 가족환경에 따른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과
결혼-출산정책에 대한 선호경향과 정책개발 61
정민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발표 4. 출산률 제고를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101
최성일(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신혼집 마련과 첫 자녀 출산의 관계

김한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신혼집 마련과 첫 자녀 출산의 관계

김한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가족형성과 확대의 중요한 기제 (mechanism)로써 주택에 주목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나라들은 “내 집 소유”를 열망하고 있으며(Morris & Winter 1985; Murphy, 1985) 주택 소유를 매우 중요한 삶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Michelson, 1977; Lam, 1985; Saunders, 1990; Mulder & Wagner, 1998).

Mulder(2006)는 주택과 출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부 나라에서 주택 소유가 가족형성을 촉진시킨다고 언급하였으며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가족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각 나라마다 주택 문화 규범이 조금씩 상이하고 주택 시장으로의 접근성 및 정부의 주택 정책에 따른 차이에서 비롯된다. 특히, 주택 소유 규범이 중요시되는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거나 임대주택 시장이 매우 협소한 경우에 가족 형성과 출산이 지연되었다(Castiglioni & Dalla Zuanna, 1994; Krishnan & Krotki, 1993; Mulder & Wagner, 2001; Pinnelli, 1995).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내 집 마련을 소시민들의 꿈의 실현이자 자립의 기반으로 간주해왔다. 우리나라는 주택문제의 본질이 주택의 양적부족에 있다고 보았고 주택 보급률의 제고를 주요 정책목표로 생각해왔다. 이에 주택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2002년 100%를 초과달성하는 등 양적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으나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덜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2006)이 기혼여성과 미혼남녀 6,472명을 조사한 결과, 주택마련 부담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거나 아이를 적게 낳는 배경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9)의 조사에 따르면 기혼자 중

17.4%가 전세금 또는 주택자금 마련 문제 때문에 2세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한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간의 인식에 근거해 판단해볼 때, 한국사회에서의 주택마련이 실제로 결혼과 자녀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인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택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음에도 이와 관련한 국내의 학문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때문에 각 나라마다 주택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배경이 조금씩 다르고 주택 시장, 주택 정책 수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경험적 연구사례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2. 연구목적

앞서 언급한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주택마련 부담은 가족형성과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혼인 초기의 신혼집 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및 연구가설

1. 문헌고찰

1.1 주택 소유와 가족형성

국외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주택 소유와 가족형성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첫 주택 마련은 결혼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가족형성이 촉진되었다. 그와 동시에 서독과 네덜란드에서는 자녀출산으로의 이행이 빠르게 나타났다(Clark et al., 1994; Deurloo et al., 1994, 미국; Clark & Dieleman, 1996, 미국과 네덜란드; Feijten & Mulder, 2002, 네덜란드; Mulder & Wagner, 1998, 서독과 네덜란드).

주택 소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자가 주택은 임대주택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Megbolugbe & Linneman, 1993). 자가 주택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단독 주택인 경우가 많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적합한 근린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가족을 형성하거나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Mulder, 2006). 또한 주택 소유는 부의 축적을 도울 뿐 아니라, 대물림이 가능하다 (Megbolugbe & Linneman, 1993). 무엇보다 가족 자체의 요구 및 계획에 따라 임의로 주택을 변경,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Saunders, 1990).

각 나라마다 자녀출산에 따른 주택 소유 시점 역시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독의 경우,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둘째를 출산할 즈음, 네덜란드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출산을 기대하는 부부에게서 주택소유로의 이행이 빈번하게 나타났다(Mulder & Wagner, 1998).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의 주택 시장과 자금 시스템 그리고 정부의 주택 정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 주택 소유가 자녀수를 축소한다는 주장도 있다. Pinnelli(1995)는 높은 주택 소유 비율은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를 지연시키고 젊은 세대들의 독립적인 가족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출산으로의 이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결혼은 곧 주택마련과 함께 시작한다는 '문화'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어 주택소유가 어려울 경우, 부모로부터 늦게 독립하거나 주택 마련이 가능할 때까지 혼인을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진다(Kennett & Leather, 1999). Courgeau와 Lelie'vre(1992)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와 아이의 출산 및 양육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됨을 언급하였다. 결혼 후, 주택 구입에 많은 재화를 이용한 경우에도 자녀수 축소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임대보다 자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Hakim, 2003; Murphy & Sullivan, 1985).

1.2 주거 특성과 출산

흥미로운 점은 주택 소유여부 뿐만 아니라, 주거형태, 주거 면적에 따라 출산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Thomson(1983)은 적절한 주택 수준이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녀수를 축소하거나 심지어 자녀출산을 포기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주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각 나라마다 주거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선호되고 있다. 또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주거형태에 따른 출산율 변동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H. Kulu & A. Vikat 1997).

Murphy와 Sullivan(1985)의 연구에서는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사례에서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Felson과 Solauns(1975)는

콜롬비아 Bogota 연구를 통해 주택시장이 협소하여 주거이동을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적거나 과밀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때 출산율이 줄어들었음을 제시하였다. 또 현재의 주거공간에 만족하거나 향후 손쉽게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추가자녀출산을 삼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과밀 자체가 출산을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과밀한 주택 상황에서의 주관적 경험들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자녀출산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출산율 축소는 자발적인 것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의 좁은 주택시장에서 나타난 낮은 출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ydarfar(1995)는 이란의 네 개 도시를 대상으로 단독주택(single-family housing units)에 사는 사람이 공동주택(multi-family housing units)에 사는 사람보다 자녀출산 의도가 높았으며 실제로도 높은 출산율을 보였음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Curry와 Scriven(1978)은 Felson과 Solauns(1975)의 연구를 토대로 Bogota보다 조금 느슨한 주택시장을 가진 중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과 출산 수준을 축소하는 것 사이에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출산수준이 단순한 주거형태, 면적에 국한되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앞으로의 주거 확대 가능성에 따라 가족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1.3 주택 시장으로의 접근성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 소유를 원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는 자가 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시장의 형성 여부와 주택공급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가와 임대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에도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택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거나 주택 소유가 여의치 않거나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족 형성과 출산이 지연되었다(Castiglioni & Dalla Zuanna, 1994; Krishnan & Krotki, 1993; Mulder & Wagner, 2001; Pinnelli, 1995). 임대주택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공급량이 충분하다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주택 시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고 이는 곧 주택 소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택 소유의 관념이 매우 중요시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가족 형성과 첫 째 자녀의 출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가족 구성원 수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Kohler, Billari & Ortega, 2002; Morgan & Taylor, 2006). 분명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안전정인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을 마련할 때뿐만 아니라, mortgage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부(wealth)가 필요한데 이때, 개인 또는 부부의 자산뿐만 아니라, 부모의 도움

또는 mortgage의 접근성 여부에 따라 주택 마련 시기와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Gusio와 Jappelli(2003)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어 부모로부터의 사적소득이 전이 주택 소유로의 이행을 빠르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Mulder와 Billari(2006)는 주택 소유 수준과 mortgage로의 접근성에 따라 출산율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때 75% 이하의 주택 소유율과 1.7이하의 합계출산율을 '낮은 수준'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표1>과 <표2>에 제시되어 있다.

mortgage가 보편화 되어있을 때 이는 주택 구입의 중요재원으로 이용된다. 반면 mortgage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저축이나 부모로부터의 도움, 유산에 따라 자가 점유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주택 소유가 보편적이지 않고 집을 구입할 때 mortgage가 주요한 재원으로 이용된 경우, 주택소유 규범 유무에 따라 자가와 임대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소유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자가 대신 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주택 소유가 강한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자녀출산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영국의 상황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주택 소유 수준과 mortgage로의 접근성이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쉽게 소유할 수 있는데 유럽국가들 중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노르웨이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주거 소유 수준이 높으면서 mortgage로의 접근성이 낮고 임대시장마저 협소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는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자가 점유율이 매우 높은 나라중 하나이며 개인의 저축이 주택 마련의 가장 보편화된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다 (Mulder, 2006). 스페인의 mortgage 평균금리는 2007년 12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건설은 절반이하로 급감하였다(Spain INE, 2007). 여기에 청년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사람들은 대출받기를 어려워한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더불어 자녀 출산과 양육, 결혼 후 분가까지의 비용을 부모가 전담하는 남유럽의 가족주의 문화역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학술대회

〈표 1〉 주택 소유와 mortgage접근성에 따른 출산율

주택 소유 수준	mortgage 접근성	특징 및 해당 국가	출산율
낮음	높음	주택 소유규범의 존재여부에 따라 출산율이 다름. -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가 소유 대신 임대주택이 대안이 됨. - 규범이 존재할 경우, 주택마련까지 자녀출산 연기.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미국에 비해 낮음
	낮음	자가 소유 대신 임대주택이 대안이 됨. 개인의 저축, 가족의 도움, 유산이 주택구입의 주요 재원.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각각 다름
높음	높음	주택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함.(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매우 높음
	낮음	임대 시장이 매우 협소함. 개인의 저축, 가족의 도움, 유산이 주요 재원이 됨. 특히, 가족의 도움이 매우 크게 작용함. 따라서 부모로부터 독립이 지연됨.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매우 낮음

* Mulder & Billari(2006) 재구성

〈표 2〉 각 나라별 자가 점유율, 합계 출산율

	자가 점유율(%)	합계출산율
덴마크	65.0	1.77
룩셈부르크	70.8	1.76
독일	43.4	1.38
네덜란드	54.4	1.72
스웨덴	59.9	1.54
스위스	34.6	1.50
영국	70.6	1.64
미국	67.5	2.06
오스트리아	53.7	1.36
벨기에	72.9	1.66
프랑스	62.7	1.88
포르투갈	65.0	1.55
아이슬란드	78.0	1.93
아일랜드	80.0	1.98
노르웨이	77.0	1.85
이탈리아	75.5	1.24
스페인	85.3	1.24
그리스	83.6	1.29

* Mulder & Billari(2006) 재구성

1.4 한국의 상황

주택은 가족의 생활을 담는 기본적인 공간이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개인의 자산은 크게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구분되며 부동산 자산 중에서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문규현, 2010).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과 전·월세 등의 민간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아(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7) 주택소유 규범이 높은 나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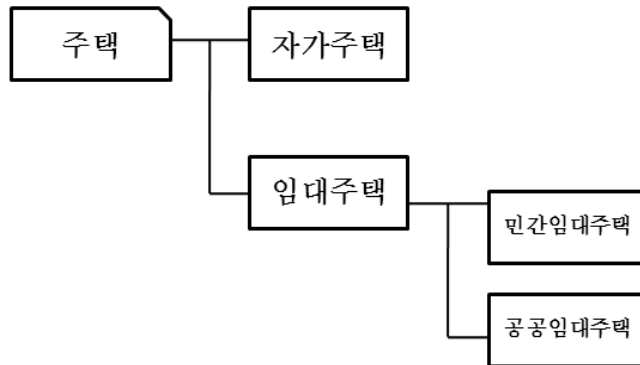
1.4.1 주택 상황

우리나라의 주택유형은 <그림1>과 같이 크게 개인소유의 자가 주택과 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대주택은 다시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세와 월세는 민간임대 주택에 해당되고 공공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양현석, 김원년, 2009); 매매와 월세개념을 지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세가 주류를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문규현, 2010). 특히,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계약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매우 독특한 시스템을 지닌다. 전세와 월세는 임대료 지불방식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으로 받아 그 자금의 이자와 월세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임대차제도다”(김혜승, 2002, p16). 이는 전세금보다 적은 보증금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전세금과 보증금의 차이를 월임대료 지불을 통해 충당하는 월세계약과 차별화된다(이상일, 이창무; 2006).

1.4.2 주택 가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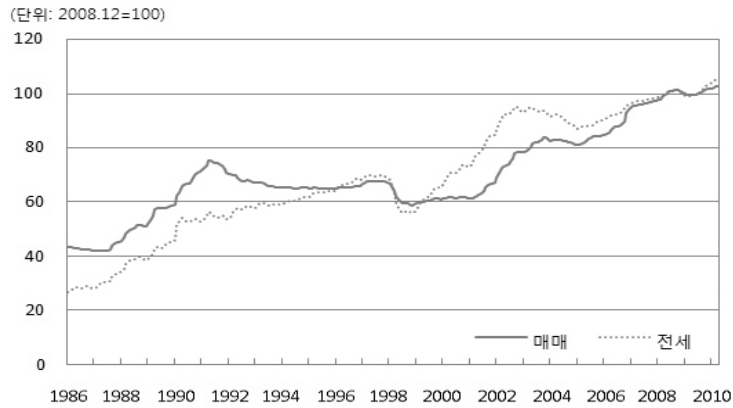
<그림2>는 2008년 12월 기준대비 1986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크게 세 차례 급등하였다(최영준 외, 2008). 제 I 상승기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약 4년 걸쳐 나타났으며 1992년, 건설경기 진정대책과 주택 200만호 건설에 힘입어 주택물량이 대량 공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199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8년 말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주택가격이 10%이상 급락하였다(임대봉, 2007). 이에 1998부터 1999년에 걸친 다양한 세제, 금융지원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주택가격은 2000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회복,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반면, 경제위기 이후 신규주택 공급의 감소,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한 소형주택의 공급 감소 등으로 2001년부터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제Ⅱ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는 강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김경환,2002). 왕세종(2004)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2004년 말 중부세 완화조치와 건설경기 부양책에 의해 2005년에 제Ⅲ상승기에 들어선 이래 주택가격은 현재까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조주현과 임정호(2004)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자가, 전세, 월세로 나누어 각 시장 사이의 시계열적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월세가격에 영향을 미침을 연구하였다.



<그림 5> 우리나라의 주택유형

〈그림 2〉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 자료: 국민은행

2. 연구가설

위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혼인 초기의 신혼집 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신혼집 점유형태와 마련비용을 부담한 대상에 따라 자녀출산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신혼집을 구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출산을 덜 하였을 것이다.
- (2) 대출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녀출산을 덜 하였을 것이다.
- (3) 각 시기별 혼인코호트에 따라 신혼집 마련방법에 따른 자녀출산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각각 다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및 대상자

1.1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2009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0-44세의 기혼여성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의식, 태도 및 행태 등을 묻고 있다. 조사표는 크게 가구조사표와 기혼여성조사표, 미혼자조사표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구조사표와 기혼여성조사표를 이용하였다. 가구조사에 나타난 20-44세 기혼자 수는 4,217명이며, 이 중 3,585명의 기혼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기혼자조사 완료율은 85.0%이다.

1.2 대상자

본 연구는 만20세-44세 기혼여성 3,585명 중 재혼과 사별, 이혼, 별거, 무응답을 제외한 초혼 유배우자 여성 중 정보의 누락이 없는 3,11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크게 세 차례 급등하였고(최영준 외, 2008)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외환위기 전후로 바뀌었으며(이성용, 2006) 특히 2001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왕세중, 2004)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혼인신고 연도에 따라 2000년 이전, 2001년부터 2005년 그리고 2006년 이후의 세 혼인코호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는 혼인 시점에서의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및 종사상 지위에 결측값이 많아 이 문항들을 연구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혼인 시점 대신, 조사가 이루어진 현재 시점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혼인 당시의 남편이 현재의 배우자와 동일한 경우만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물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시간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혼인연령이 27.4세임을 감안할 때, 연구대상자는 혼인 이전에 모든 교육을 끝마쳤고 당시의 교육수준과 현재의 교육 수준이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남편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혼인 당시의 종사상 지위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

자, 일용근로자로 비교적 간단하게 classified되어있고, 연구 대상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classification사이의 직업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proxy 변수로서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2. 주요변수

2.1 종속변수

신혼기간에 대한 학술적, 규범적인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혼기간을 출산과 연관 지어 고려하였다. 보통, 혼인 이후 임신과 출산까지 빠르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자녀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1년-2년 정도라고 보았을 때, 이 기간 중에 임신을 하여 실제 출산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부터 이후 3년까지를 신혼기간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때 출산을 한 경우를 신혼출산으로 정의하였다.

2.2 독립변수

신혼집 마련방법은 [신혼집 점유 형태]와 [마련비용을 주로 부담한 대상], 이 두 가지 문항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구입」,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를 합하여 「월세」로 분류하였으며 친정 부모 또는 시부모 집에 살고 있는 경우를 「부모와 함께 삶」으로 세분하였다. 또 신혼집 마련비용을 주로 부담한 대상을 고려함에 있어서 신부와 신랑 본인(개인) 또는 신부와 신랑(개인)이 반반씩 부담한 경우를 「본인부담」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에 친정, 시댁, 양가 반반씩 부담, 신랑과 친정 반반씩 부담, 신부와 시댁이 반반씩 부담한 경우를 「부모부담」으로 간주하였다. 위의 두 문항 모두 기타범주에 해당하는 사례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월세의 경우, 빈도가 높지 않아 본인부담과 부모부담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혼집 마련방법을 「구입 본인」, 「구입 부모」, 「전세 본인」, 「전세 부모」, 「월세 본인+부모」, 「부모 집에서 삶」으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답한 경우를 「대출이 있다」고 보았으며 “없다” 또는 “부모와 함께 삶”이라고 답한 경우를 「대출이 없다」로 구분하였다.

거주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 분류하였다. 이는 지역에 따라 주택 가격, 소유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관련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혼인 시점 대신, 부인의 현재 교육 수준 및 남편의 현재 종사상 지위를 고려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정도와 교육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재학, 중퇴, 휴학이 아닌, 졸업일 경우에만 해당 교육수준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교 중퇴 또는 휴학일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분류하였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신혼출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시점 변수 신혼집 마련방법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여부 거주 지역 부인의 혼인연령 부인의 혼인 당시 취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점 변수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 남편의 현재 종사상지위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9.1 version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 각 혼인코호트별 신혼집 마련방법에 따른 신혼출산을 파악하기 위해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4>와 같다. 혼인코호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상당수의 여성이 결혼 후 3년 내, 즉 신혼기간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신혼집 마련은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세 코호트그룹 모두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신랑·신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신혼집 마련방법은 「전세 본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를 통해 전세가 신혼기간의 보편적인 점유형태임을 알 수 있다. 코호트1에서 코호트3으로 갈수록 주택 구입 비율은 증가한 반면, 부모 집에서 사는 경우는 감소하였다. 전세와 월세 비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강하였다. 신혼집 마련 시 대출비율 역시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표5>는 이를 각 코호트별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2000년 이전에 혼인한 코호트1에 비해 2001년 이후 혼인한 코호트2와 코호트3에서 주택 구입 시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호트2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 역시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든 코호트에서 「전세 본인」보다는 「전세 부모」에서 대출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이 개입될 때 대출비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도움이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필요로 할 만큼 신혼집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표4>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동부에 살고 있다. 부인의 혼인연령은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이는 부인의 평균 혼인연령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코호트1에서 24.93세였던 평균 혼인연령은 코호트2와 3에서는 각각 27.88세, 29.04세로 점차 증가하여 시기별 코호트에 따른 차이가 상이하였다. 또 후기코호트로 갈수록 부인의 혼인당시 취업과 학력수준이 높아졌는데 특히, 코호트1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286명(59.66%)으로 전체 교육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반해 코호트2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감소하는 대신, 전문대졸업과 대학교 졸업이 증가하였고 코호트3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비율과 비슷해졌다. 남편의 현재 종사상 지위는 최근 혼인그룹으로 올수록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가 감소하는 대신, 상용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명, %)		
	코호트1 2000년 이전 (N=2018)	코호트2 2001-2005년 (N=633)	코호트3 2006년 이후 (N=464)
신혼기간 내 자녀출산			
했음	1775(87.96)	555(87.68)	279(60.13)
안 했음	243(12.04)	78(12.32)	185(39.87)
신혼집 마련방법			
구입 본인	127(6.29)	61(9.64)	54(11.64)
구입 부모	72(3.57)	49(7.74)	37(7.97)
전세 본인	869(43.06)	247(39.02)	194(41.81)
전세 부모	525(26.02)	152(24.01)	100(21.55)
월세 본인+부모	234(11.60)	68(10.74)	50(10.78)
부모 집에서 삶	244(17.05)	56(8.85)	29(6.25)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여부			
있다	344(17.05)	136(21.48)	112(21.14)
없다	1674(82.95)	497(78.52)	352(75.86)
거주 지역			
동부	1735(85.98)	527(83.25)	385(82.97)
읍면부	283(14.02)	106(16.75)	79(17.03)
부인의 혼인연령			
25세 이하	1188(58.87)	159(25.12)	70(15.09)
26-30세	736(36.47)	342(54.03)	252(54.31)
31-35세	90(4.46)	104(16.43)	105(22.63)
36세 이상	4(0.20)	28(4.42)	37(7.97)
부인의 평균 혼인연령	24.93세	27.88세	29.04세
부인의 혼인 당시 취업여부			
취업	1204(59.66)	415(65.56)	323(69.61)
미취업	814(40.34)	218(34.44)	141(30.39)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86(63.73)	283(44.71)	181(39.01)
전문대졸업	289(14.32)	150(23.70)	111(23.92)
대학교 졸업 이상	443(21.95)	200(31.60)	171(37.07)
남편의 현재 종사상지위			
상용직	1183(58.62)	434(68.56)	368(79.31)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635(31.47)	126(19.91)	50(10.78)
임시/일용 근로자	129(6.39)	47(7.42)	36(7.76)
무급가족 종사자/비경제활동	71(3.52)	26(4.11)	10(2.16)

<표 5> 각 혼인코호트별 신혼집 마련 시 대출비율

(단위: 명, %)

신혼집 마련방법	코호트1 2000년 이전 (N=344)	코호트2 2001-2005년 (N=136)	코호트3 2006년 이후 (N=112)
구입 본인	51(40.16)	31(50.82)	23(42.59)
구입 부모	21(29.17)	25(51.02)	19(51.35)
전세 본인	169(19.46)	53(21.46)	46(23.71)
전세 부모	63(12.00)	22(14.47)	18(18.00)
월세 본인+부모	40(17.09)	5(7.35)	6(12.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혼출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혼출산은 <표6>과 같다. 코호트1과 코호트2의 경우, 신혼집 마련 방법과 대출여부에 관계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혼출산을 하였다. 부인의 혼인연령에 따른 출산 수준을 비교해보면 두 코호트 모두 전체 연령층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이는 첫 자녀출산을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신혼출산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혼인 당시 미취업 상태일 때가 취업중일 때보다 신혼출산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과 남편의 현재 종사상 지위에 따른 신혼출산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코호트3은 앞서 살펴본 이전 코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코호트에 속한 기혼여성은 각 개인별로 혼인기간이 채 1년이 되지 못하였거나 2년 또는 3년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코호트에 비해 전체적으로 신혼출산을 덜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본인 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세 또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자녀출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전 코호트에서는 대출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신혼출산 정도가 약간 높거나 비슷하였으나 코호트3에서는 대출이 없을 때(61.08%)가 있을 때(57.14%)보다 신혼출산을 더 많이 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호트1과 코호트2의 전체 연령층 중에서 26-30세에 혼인한 부인이 가장 높은 출산수준(각각 92.66%, 90.35%)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같은 연령대의 코호트3에서는 가장 낮은 출산수준(54.37%)을 보였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혼출산

(단위: 명, %)

	코호트1 2000년 이전 (N=2018)	코호트2 2001-2005년 (N=633)	코호트3 2006년 이후 (N=464)
신혼기간 내 자녀출산 총 인원	1775(87.96)	555(87.68)	279(60.13)
신혼집 마련방법			
구입 본인	105(83.68)	53(86.89)	34(62.96)
구입 부모	66(91.67)	46(93.88)	21(56.76)
전세 본인	757(87.11)	205(83.00)	111(57.22)
전세 부모	466(88.76)	141(92.76)	53(53.00)
월세 본인+부모	211(90.17)	59(86.76)	34(68.00)
부모 집에서 삶	170(89.01)	51(91.07)	26(89.66)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여부			
있다	306(88.95)	126(92.65)	64(57.14)
없다	1469(87.75)	429(86.32)	215(61.08)
거주 지역			
동부	1530(88.18)	456(86.53)	229(59.48)
읍면부	245(86.57)	99(93.40)	50(63.29)
부인의 혼인연령			
25세 이하	1009(84.93)	137(86.16)	49(70.00)
26-30세	682(92.66)	309(90.35)	137(54.37)
31-35세	81(90.00)	90(86.54)	65(61.90)
36세 이상	3(75.00)	19(67.86)	28(75.68)
부인의 혼인 당시 취업여부			
취업	1044(86.71)	360(86.75)	179(55.42)
미취업	731(89.80)	195(89.45)	100(70.92)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5(89.81)	244(86.22)	120(66.30)
전문대졸업	256(88.58)	133(88.67)	69(62.16)
대학교 졸업 이상	364(82.17)	178(89.00)	90(52.33)
남편의 현재 종사상지위			
상용직	1052(88.93)	385(88.71)	214(58.15)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548(86.30)	106(84.13)	32(64.00)
임시/일용 근로자	116(89.92)	40(85.11)	26(72.22)
무급가족 종사자/비경제활동	59(83.10)	24(92.31)	7(70.00)

3. 신혼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신혼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각 혼인코호트별로 <표7>, <표8>, <표9>와 같다. Model I 은 신혼집 마련방법과 거주 지역, 부인의 혼인 연령 및 혼인 당시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Model II 는 Model I 을 통제된 상태에서 대출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피고 있다. Model III 는 full model로써 본 연구의 모든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best-fitting model이다.

3.1. 2000년 이전 혼인코호트

2000년 이전 혼인코호트의 Model I 을 살펴보면 신혼집을 혼인 당사자가 구입한 것에 비해 혼인 당사자가 전셋집을 마련했을 때를 제외한 모든 신혼집마련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신혼집 마련 방법이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신혼출산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인연령에 있어서는 25세 이하보다 26세-30세 그룹에서 2.3배 이상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 코호트 그룹의 평균 혼인연령이 24.93세인 것을 감안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부인이 신혼기간 내 자녀출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인이 혼인당시 미취업일 때가 취업일 때보다 신혼출산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혼인과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I 에 대출여부를 포함시켜 확장한 Model II 는 대출여부가 신혼집 마련방법 전반에 영향을 미쳐 Model I 과 마찬가지로 전세 본인 범주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그러나 대출여부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odel III 에서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과 남편의 현재 종사상 지위를 통제하한 상태에서도 부모의 도움이 개입된 모든 범주에서 신혼출산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자녀출산을 더 많이 하였는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생각해볼 때,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여부가 주택마련과 출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덜 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며 남편이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이거나 무급가족 종사자 혹은 비경제활동 중일 때가 상용직에 비해 신혼출산정도가 크게 낮았다.

<표 7> 2000년 이전 혼인코호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N=2018)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0% CI)	OR	(90% CI)	OR	(90% CI)
신혼집 마련방법[구입 본인]						
구입 부모	2.30*	(1.03-5.16)	2.34*	(1.04-5.25)	2.33*	(1.03-5.26)
전세 본인	1.43	(0.93-2.19)	1.47	(0.96-2.26)	1.40	(0.91-2.17)
전세 부모	1.70*	(1.08-2.67)	1.76**	(1.11-2.80)	1.64*	(1.03-2.61)
월세 본인+부모	2.11**	(1.24-3.61)	2.18**	(1.27-3.75)	1.79**	(0.99-3.21)
부모 집에서 삶	1.86*	(1.07-3.22)	1.96**	(1.12-3.44)	1.93*	(1.11-3.35)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여부[있다]						
없다			0.86	(0.63-1.19)	0.85	(0.61-1.17)
거주 지역[동부]						
읍면부	0.88	(0.64-1.21)	0.89	(0.65-1.22)	0.83	(0.60-1.14)
부인의 혼인연령[25세 이하]						
26-30세	2.36***	(1.80-3.09)	2.35***	(1.79-3.08)	2.55***	(1.94-3.36)
31-35세	1.76	(0.97-3.20)	1.74	(0.96-3.17)	1.58	(0.87-2.89)
36세 이상	0.53	(0.08-3.62)	0.54	(0.08-3.71)	0.50	(0.07-3.63)
부인의 혼인당시 취업여부[취업]						
미취업	1.43**	(1.12-1.81)	1.43**	(1.13-1.82)	1.45**	(1.14-1.85)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졸업					0.84	(0.59-1.19)
대학교 졸업 이상					0.46***	(0.35-0.60)
남편의 현재 종사상지위[상용직]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0.78*	(0.60-1.00)
임시/일용 근로자					1.01	(0.59-1.70)
무급가족 종사자/비경제활동					0.56*	(0.32-0.98)
-2LL(d.f.)	1441.594(10)		1440.985(11)		1414.377(16)	

[]: reference group

*p<0.1; **p<0.05; ***p<0.01

3.2. 2001-2005년 혼인코호트

2001-2005년 혼인코호트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Model I에서는 신혼집 마련 방법에 따른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취업여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인의 혼인연령이 25세 이하일 때보다 36세 이상일 때 신혼출산이 현저하게 낮았다.

대출여부를 고려한 Model II에서도 신혼집 마련 방법에 따른 출산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대출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자녀출산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동부에 살 때보다 읍면부에 살 때 자녀출산을 더 많이 하였다.

ModelⅢ에서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신혼집 마련방법은 이전 Model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의 통제 여부에 관계없이 이 코호트의 신혼집 마련 방법은 신혼출산과 관계성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2001-2005년 혼인코호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N=633)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0% CI)	OR	(90% CI)	OR	(90% CI)
신혼집 마련방법[구입 본인]						
구입 부모	1.96	(0.60-6.43)	1.90	(0.57-6.27)	1.89	(0.57-6.26)
전세 본인	0.61	(0.30-1.24)	0.73	(0.35-1.52)	0.75	(0.36-1.57)
전세 부모	1.46	(0.63-3.39)	1.85	(0.78-4.41)	1.88	(0.79-4.47)
월세 본인+부모	0.72	(0.29-1.75)	0.95	(0.38-2.40)	0.98	(0.38-2.48)
부모 집에서 삶	1.28	(0.46-3.54)	1.79	(0.63-5.09)	1.96	(0.68-5.64)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여부[있다]						
없다			0.45**	(0.24-0.83)	0.46**	(0.24-0.86)
거주 지역[동부]						
읍면부	2.08	(1.03-4.18)	2.03*	(1.01-4.08)	2.16*	(1.06-4.39)
부인의 혼인연령[25세 이하]						
26-30세	1.44	(0.88-2.37)	1.37	(0.83-2.26)	1.39	(0.84-2.31)
31-35세	1.08	(0.58-1.99)	1.04	(0.56-1.93)	1.03	(0.55-1.93)
36세 이상	0.32**	(0.15-0.72)	0.30**	(0.13-0.67)	0.31**	(0.14-0.72)
부인의 혼인당시 취업여부[취업]						
미취업	1.38	(0.88-2.18)	1.44	(0.91-2.27)	1.47	(0.93-2.33)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졸업					1.11	(0.65-1.89)
대학교 졸업 이상					1.21	(0.74-2.01)
남편의 현재 종사상지위[상용직]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0.73	(0.44-1.21)
임시/일용 근로자					0.77	(0.36-1.64)
무급가족 종사자/비경제활동					1.79	(0.49-6.57)
-2LL(d.f.)	446.464(10)		441.288(11)		438.733(16)	

[]: reference group

*p<0.1; **p<0.05; ***p<0.01

3.3. 2006년 이후 혼인코호트

2006년 이후 혼인코호트의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 혼인 코호트와 달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신혼출산경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높은 주택비용 마련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법으로써 부모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히려 부모와 동거함으로써 가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9> 2006년 이후 혼인코호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N=464)

	Model I		Model II		Model III	
	OR	(90% CI)	OR	(90% CI)	OR	(90% CI)
신혼집 마련방법[구입 본인]						
구입 부모	0.84	(0.40-1.73)	0.84	(0.41-1.74)	0.88	(0.42-1.84)
전세 본인	0.78	(0.45-1.33)	0.77	(0.45-1.32)	0.76	(0.44-1.32)
전세 부모	0.73	(0.41-1.31)	0.72	(0.40-1.30)	0.75	(0.41-1.37)
월세 본인+부모	1.12	(0.56-2.26)	1.11	(0.54-2.24)	1.01	(0.49-2.08)
부모 집에서 삶	4.73**	(1.55-14.44)	4.62**	(1.49-14.30)	4.39**	(1.41-13.68)
신혼집 마련 시 대출 여부[있다]						
없다			1.05	(0.71-1.56)	1.07	(0.72-1.58)
거주 지역[동부]						
읍면부	1.11	(0.71-1.74)	1.10	(0.70-1.73)	1.03	(0.65-1.63)
부인의 혼인연령[25세 이하]						
26-30세	0.62	(0.37-1.01)	0.61	(0.37-1.01)	0.67	(0.40-1.11)
31-35세	0.84	(0.48-1.47)	0.83	(0.47-1.46)	0.92	(0.51-1.63)
36세 이상	1.39	(0.64-3.05)	1.40	(0.64-3.06)	1.43	(0.65-3.17)
부인의 혼인당시 취업여부[취업]						
미취업	1.83***	(1.26-2.65)	1.82***	(1.26-2.64)	1.76**	(1.21-2.56)
부인의 현재 교육수준[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졸업					0.97	(0.63-1.15)
대학교 졸업 이상					0.75	(0.50-1.12)
남편의 현재 종사상지위[상용직]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1.19	(0.69-2.05)
임시/일용 근로자					1.21	(0.61-2.41)
무급가족 종사자/비경제활동					1.24	(0.38-4.11)
-2LL(d.f.)	591.643(10)		591.589(11)		589.197(16)	

[]: reference group

*p<0.1; **p<0.05; ***p<0.01

대출여부를 고려한 ModelⅡ, 그리고 모든 변수를 통제한 ModelⅢ에서도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 그 영향력은 지속되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Model에서 부인이 혼인 당시 미취업일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신혼출산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2009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이용하여 신혼집 마련방법이 신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시기별 혼인코호트에 따라 신혼집 마련방법에 따른 자녀출산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소 상이하였다. 2000년 이전에 혼인한 경우, 신혼집 점유형태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상당수는 부모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혼인 당사자의 노력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된 모든 범주에서 자녀출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도움을 통해 보다 쉽게 주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곧 자녀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한편, 개인의 신혼기간 내 출산정도는 신혼집 마련방법 뿐만 아니라, 부인의 혼인연령, 취업여부, 남편의 종사상 지위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와도 큰 연관성을 보였다. 해당 코호트의 평균 혼인연령이 24.93세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여성이 혼인 후 자녀출산을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첫 자녀출산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며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첫 출산을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또 부인이 혼인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자녀출산 정도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혼인과 출산을 위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경력을 단절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도 출산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 소득원이 되는 남편의 고용안정성이 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2001년부터 2005년에 혼인한 여성의 경우, 신혼집 마련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보다는 대출여부에 따라 자녀출산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대출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출산을 더 많이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가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이전에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급락했으며 이후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매매와 전세 가

격 모두 급상승하였다. 따라서 2001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코호트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주택 마련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대출의 영향이 이전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점유형태에 구매받기 보다는 신혼집 마련 자체에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마련 재원 중 하나로써 혼인 당사자의 저축과 부모의 도움뿐만 아니라 대출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2006년 이후 혼인코호트 중, 부모 세대와 동거하는 부부의 비율이 7.6% 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녀출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부모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높은 신혼집 마련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집안일에 대한 도움 기대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히려 부모와의 동거가 가구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의 여부를 고려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부나마 각 시기별로 신혼출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의 신혼집 마련방법에 따른 신혼출산은 뚜렷한 정(+) 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또 다른 모델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택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아이를 덜 낳을 수밖에 없다는 세간의 인식처럼 주택마련이 결혼과 자녀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경우, 높은 주택 소유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어려운 경제시기와 맞물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상당수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는 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임대시장의 형성 및 접근성 여부와 공급량에 따라 결혼 시기와 자녀출산 수준이 결정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양적측면에서의 주택보급률이 높은 상태임에도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산재해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는 물론 임대 가격마저 극도로 높아 자가 대신 임대를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어 국외의 상황과 구별된다. 또 결혼과 주택마련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일부 나라들과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높은 주택 진입장벽(entry barrier)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통해 주거 서비스를 대체 소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김종구, 2001) 결혼초기의 보편적인 점유형태로써 전세 시스템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주택소유는 온전히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부모의 도움이 일정 부분 있다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출을 필요로 할 만큼 신혼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비단 신혼집뿐만 아니라,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평균 10년

이 소요(통계청, 2009)되고 있다는 통계 역시 주택소유의 어려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혼인 초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다소 부족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은 물론 해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택 마련방법과 대출 여부에 따른 자녀출산의 특성을 체계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들로는 이들의 영향력을 온전히 예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국내의 대다수의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써 주택을 간주하는데 그쳤으며 주택과 출산과 관련한 실증 연구가 행해진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의 첫 시도이며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깊이를 더하였다. 물론, 분석결과를 타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지만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 연구결과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자녀출산에 대한 주택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킴으로써 앞으로의 연구 필요성은 물론, 보다 면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 소유 관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의 대다수가 주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혼인 후 첫 자녀 출산을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해볼 때, 현재 또는 과거의 주택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주거 확대 가능성과 이동 가능성에 따라 출산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한 주택 소유 여부, 점유 형태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가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절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도적인 지지 하에 주택이동성이 지금보다 용이할 경우, 자녀출산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환, 2002.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시장 안정정책, 한국경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2); 55-84.
- 김혜승, 2002. 전세의 월세전환 추세와 대응방향, 국토연구원: 11(253)16-25.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7, '97무주택가구 주거실태 조사보고서.
- 문규현, 2010.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발견 · 매매가격/전세가격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연구: 23(2); 797-811.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 양현석, 김원년, 2009. 공공임대주택수요 추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접근, 재정정책논집 11(2) 39-68.
- 왕세종, 2004.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지역간 상관관계 분석, 주택금융월보12(5) 2-39.
- 이상일, 이창무, 2005. 전세와 보증부월세간 선택요인과 주거수요 편차, 주택연구 14(1) 139-163.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 임대봉, 2007.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대책방안, 2007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
- 조주현, 임정호, 2004.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및 월세가격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0(2) 17-29.
- "집이 없어 아이 낳기 힘들어요", 머니투데이 뉴스, 2006년 3월 22일.
- "주거의 사회학 5명 중 1명 집값 문제로 출산 포기", 경향뉴스, 2010년 4월 12일.
- 최영준, 손창남, 조강철, 2008. 주택가격의 추이와 지역간 파급여부 분석, 한국은행. 통계청(Statistics Korea), 2009.
- Spain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07.
- Castiglioni, M., & Dalla Zuanna, G. (1994). Innovation and tradition: Reproductive and marital behaviour in Italy in the 1970s and 1980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0(2), 107-142.
- Clark, W. A. V., Deurloo, M. C., & Dieleman, F. M. (1994). Tenure changes in the context of micro level family and macro level economic shifts. *Urban Studies*, 31(1), 137 - 154.
- Clark, W. A. V., & Dieleman, F. M. 1996. Households and housing: Choice and outcomes in the housing market. New Brunswick: Centre for Urban Policy

Research.

- Courgeau, D., & Lelievre, E. (1992). Interrelations between first home-ownership, constitution of the family, and professional occupation in France. In J. Trussell, R. Hankinson, & J. Tilton (Eds.), *Demographic applications of event history analysis* (pp. 120 - 140). Oxford: Clarendon Press.
- Curry, J. P. and G. D. Scriven. 1978. The 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living and fertility for Blacks, Mexican-Americans, and other Americans in Racine, Wisconsin, *Demography* 15(4): 477-485.
- Dieleman, F. M. & Everaers, C. J., 1994. From renting to owning: life course and housing market circumstances, *Housing Studies* 9(1): 11-25.
- Feijten, P., & Mulder, C. H. (2002). The timing of household events and housing events in the Netherlands: A longitudinal perspective. *Housing Studies*, 17(5), 773-792.
- Felson, M. and M. Solauns. 1975. The fertility-inhibiting effect of crowded apartment living in a tight housing marke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 (6), 1410-1427.
- Forrest, R., Kennett, P., & Leather, P., 1999. Home ownership in crisis? The British experience of negative equity. Aldershot: Ashgate.
- Guiso, L., & Jappelli, T., 2003. Private transfers, borrowing constraints, and timing of homeownership.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34(2), 315-339.
- Morgan, S. P., & Taylor, M. G., 2006. Low fertility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375-399.
- Hakim, C. (2003). *Models of the family in modern societies: Ideals and realities*. Aldershot (U.K.): Ashgate.
- H. Kulu, A. Vikat, 2007. *Demographic Research*, 17(26), 775-802.
- Kohler, H.-P., Billari, F. C., &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Krishnan, V., & Krotki, K. J. (1993). Life cycle effects on home-ownership in Canada. *Housing Studies*, 8(2), 120-127.
- Megbolugbe, Isaac F., & Peter D. Linneman, (1993). Home ownership, urban studies, 30(4), 659-682.
- Mulder, C. H., & Wagner, M. (1998). First-time home-ownership in the family life

- course: A West German-Dutch comparison. *Urban Studies*, 35(4), 687-713.
- Mulder, C. H., & Francesco C. Billari, 2006. Home-ownership regimes and lowest-low fertility.
- Mulder, C. H., 2006. Home-ownership and family formation; *J Housing Built Environ*, 21, 281-298.
- Mulder, C. H., & Wagner, M. (2001). The connections between family formation and first-time home ownership in the context of West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7, 137 - 164.
- Mulder, C. H. (2006). Home-ownership and family formation,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21 (3): 281-298.
- Murphy, M. J., & Sullivan, O. (1985). Housing tenure and family formation in contemporary Brit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 230 - 243.
- Paydarfar, A. A. 1995. Effects of multi-family housing on marital fertility in Iran: population policy implications, *Social Biology* 42 (3-4): 214-225.
- Pinnelli, A. (1995). Women's condition, low fertility, and emerging union patterns in Europe. In K. O. Mason, & A.-M.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82-101.
- Saunders, P.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nwin Hyman.
- Thompson, W. S. 1938. The effect of housing upon population growth,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16 (4): 359-368.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에 관한 연구

김효순 사)가족문제연구소 소장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에 관한 연구

김효순 사)가족문제연구소 소장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요인이 자녀출산계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에 대한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자는 『2009 전국결혼 및 출산에 관한 동향조사』 자료에 포함된 238명의 기혼 취업여성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속변수가 출산 계획의 유무인 이분변수인 관계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월평균 사교육비와 여성의 연령은 출산 계획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교육과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인 아들의 수, 딸의 수, 그리고 일요인인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출산 계획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요인은 출산계획의도에 일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라는 가족가치관은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 간 매개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다. 본 연구는 출산율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출산, 가족가치관 및 일-가족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출산계획의도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대체 수준에 도달한 후 계속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과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1.19명과 1.09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지금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1.15명)이 유지될 경우, 2100년 남한의 인구는 2468만명으로 2010년 인구(4887만명)의 절반이 될 것이며,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명으로 축소되어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출산수준의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변천은 미래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2007).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의 재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용 증가, 국가경쟁력 쇠퇴,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 및 사회보장, 노동시장, 아동의 양육환경, 성별불균형의 심화와 지속, 노인과 장애인보호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김승권·최병호, 2002; 이삼식·조남훈, 2000; 유계숙·한지숙·안은진·최효진, 2007).

이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인구 현상의 변화원인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태현, 2005; 이병렬, 2003; 이삼식, 2007; 이인숙, 2005). 즉 결혼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수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김승권·김민자, 2003; 손승영, 2005) 가족의 구성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치 의식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2005). 김태현(2005)은 한국사회의 인구변화의 원인이 결혼관련 가치관의 약화와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래사회의 친사회적 가족가치관의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가치관이란 사회변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가족에 대한 행동의 경향과 자신이 만들어 갈 가족에 대한 기본적 신념이며 다음 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 태도를 형성해주는 개념이다. 가족가치관이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유는 건전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의 창출은 건전한 사회문화 창출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족가치관은 다음 세대의 건강한 가족형성을 도모하고, 세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므로 저출산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가족가치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저출산문제의 해결책으로 일-가족 갈등 혹은 일-가족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김사현, 2009; 김우영, 2007; 이삼식, 2007; 최숙희·김정우, 2006). 일-가족 갈등과

양립의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은 여성의 취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문제와 가사부담으로 인해 일-가족 양립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이삼식, 2007).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과 가족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미한 단계이며, 여전히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출산과 직장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성주의저널 일다, 2008.9.3; 장지연,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일-가족요인이 실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저출산대책으로서 일-가족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출산에 미치는 일-가족요인과 가족가치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가족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족요인이 자녀출산계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출산율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가족가치관과 일-가족요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개입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출산계획의도

출산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과업이고 정상적인 사건이며, 여성의 일생 동안 가장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 중에서 개인의 삶에 가장 즐겁고 감격적인 경험이며 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사회의 존속에 절대불가결한 요소로 사회구성원의 충원·증대의 측면이다(박병일, 2004).

또한 출산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먼저 있는 후 실제 아이를 갖게 되는 행동인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 하였다. 즉 출산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획과 의도가 먼저 생성되어야 하며, 의도와 행위 간에는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도 있고 단절될 수도 있다(Altucher, 2001; Higuchi, 2001). 출산계획의도는 향후 자녀의 임신출산 가능성에 관한 의도 또는 욕구·생각 및 계획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계획의도를 여성의 향후 출산계획 유무로 정의한다.

2. 가족가치관과 출산

가치관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 요인이므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나아가 만족감이나 행·불행의 판단에 까지 크게 관계 되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자 필수불가결한 규율이 된다고 할 수 있다(김경신, 1998). 특히 가족가치관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가풍, 가훈과도 연결되며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고 미래의 생활철학과 관련되어 가족을 통합하며 가족원의 의식 등에 기여하고 다음세대가 자신의 가족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해주는 개념이다(강숙경· 고정자, 1996). 그러므로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신념, 가치, 규범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 개인의 삶과 행위의 준거로 일차적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이라고 볼 때,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여러 가치관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제도이며 가치인 가족제도와 가족가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가치관도 변화하기 시작하여, 남녀평등관이나 개인주의 사상 등 서구적인 가족원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유영주· 김경신 · 김순옥, 2000; 은기수, 2001).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족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족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정옥분· 정순화 · 김경은· 박연성, 2007), 가족구성원들의 성, 성역할, 자녀출산 및, 양육, 이혼, 재혼, 동거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정자, 2004).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현대적인 가치관을,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의 특성을 보인다(유계숙· 유영주, 2002; 김기연· 신수진 · 최혜경, 2003). 교육수준과 소득, 종교에 따른 가족가치관도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유계숙· 유영주, 2002).

전반적인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196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 활발한 연구 활동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에 따른 국가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가족가치관의 다양한 하위개념들이 탐색되기 시작하였다. 김경신(2010)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효 및 부양의식,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박혜인(1990)은 자녀관, 노후관, 여성관, 전통의례관으로 분류하였다. 조소연· 오윤자(2001)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러한 영역 구분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 하위개념을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역구분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9 전국결혼 및 출산에 관한 동향조사』 자료 가운

데 가족관련 가치관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관련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하위개념으로 설정¹⁾한 것이다. 설문지의 내용을 보면 기존연구에서 하위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결혼관, 자녀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이며 또한 기초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성숙한 인격체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특히 사회구성원을 생산하여 사회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결혼가치관이란 결혼과 배우자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하며, 이러한 결혼가치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승권, 2003).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누구나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결혼규범은 한국사회에서 자식으로서 의무요,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즉, 여성에게 결혼은 지위부여와 지위상승의 중요통로로 여겨졌기 때문에, 적령기에 달하면 결혼을 하고 당연히 출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변함에 따라 여성들의 가치관에도 큰 변화가 생김으로써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즉 최근 들어 결혼이란 '필수가 아닌 선택'의 가치로 인식하게 되었다(최현수, 2005; 이삼식, 2007). 김승권·김민자(2003)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약 75.5%가 결혼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1996년에는 68%, 2000년에는 55.6%로 줄어들었다. 특히 남성(19.4%)에 비해 여성(41.5%)이 두 배 이상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보였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5-4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2000)에서는 '결혼 후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한 비율이 1991년 90.3%에서 1997년 73.3%, 2000년 58.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에 반해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로 응답한 비율은 1991년 8.5%에서 2000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손승영, 200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가치관을 개방적 결혼관과 보수적 결혼관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어렵게 결혼에 골인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덩크족도 늘고 있다(미디어다음, 2010. 06.16).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에 대한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다(방은령·신효영, 2006).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지위 또한

1) 가족관련가치관의 하위개념 중에는 성역할분담 관련문항들이 있으나 신뢰도가 너무 미미하여 하위가치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생활에서 도달한 안정적인 지위를 결혼함으로써 인한 임신과 출산에 의해 위협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박현주, 2006).

과거 농업사회에서 자녀의 존재는 가계계승, 노동력 창출, 노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자녀가 많은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즉, 전근대적 상황에서는 자녀의 질보다는 양이 중시되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였다(Gills, Tilly, Levine, 1992). 부모가 되는 데에 관한 네 가지 이유에 대해 Rabin(1965)은 첫째,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숙명적 이유이다. 둘째, 부모가 되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타주의적 이유이다. 셋째, 자녀를 갖는 것이 선을 나타내주고, 부모가 되는 것이 성인의 동족의식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도취적 이유이다. 넷째, 자식이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도구적 이유이다(권용은·김의철, 2004).

자녀에 대한 가치가 일반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출산의 변화가 관계를 맺는 연쇄적, 순환적 사건의 중요 연결고리로 생각되어 집에 따라 1970년대에 자녀가치와 출산율을 밝히는 Value of Children 연구가 8 개국에서 진행되었다(Hoffman & Hoffman, 1973). 이 연구에서 자녀의 가치는 맥락적 요인과 출산을 매개하는 심리학적 변인으로 간주되었고,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가치의 세 가지가 설명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대되는 물질적 이익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서 얻게 되리라고 기대되는 이익과 불이익을 뜻하고 심리적 가치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겪게 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권용은·김의철, 2004, 재인용).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가치들로부터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터키의 자녀가치관 연구(Kagicibasi, 1982)에서 출산율은 자녀의 심리적 가치와는 부적 상관을, 경제적 가치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국 베이징에서 수행된 1975년, 1994년, 2000년의 연구결과를 비교해보면, 자녀를 갖는 것은 기쁨을 준다는 정서적 가치는 68.6%에서 77.2%로, 다시 83.9%로 변화했고, 경제적 가치는 44.4%에서 41.8%, 다시 3.6%로 대폭 감소하였다(Trommsdorff, Gang & Tadif, 2000).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이 1.89로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이상적인 자녀수는 세 자녀수로 보고되었으며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자녀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Sabatier & Bison, 2002).

한국 여성들은 자녀에 대해 경제적이거나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를 경제적 이익의 원천으로 보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과하게 투자를 한다 해도 어머니들은 여전히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연구결과 있다(Kwon, Park & Kim, 2001).

이삼식의 연구(2007)에서는 자녀필요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또한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책임자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더 많은 출생자녀수를 두고 있다. 대중매체의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24%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명의 자녀를 둔 부부의 57%가 더 이상 자료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혼의 65%가 자녀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응답하였다(중앙일보 2004 여론조사).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의식이 출산행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강할수록 실제 자녀수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의 경우 실용적 가치관과 비실용적 가치관으로 구분하였다.

3. 일-가족요인과 출산

일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²⁾은 크게 갈등과 촉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가족 간 갈등은 일에 몰두하게 되면 가정 일에 소홀하게 되고, 가정 일에 몰두하게 되면 일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Greenhaus, Colins, & Shaw, 2003). 일-가족 촉진은 여러 역할로부터 제공되는 특권, 자원, 보상이 많아짐에 따라 일과 가족 영역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가족 조화 또는 균형의 의미로 볼 수 있다(이숙현, 2005).

일-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Fredricson-Goldsen & Scharlach(200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가족갈등은 주로 맞벌이 부부에게 많이 발생하는 갈등으로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지원부족, 비자율적인 업무, 과중한 업무, 탄력적이지 못한 업무 스케줄, 야근과 연장업무의 증가를 포함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특성과 배우자의 지원, 가사분담 정도,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지원, 배우자의 성역할과 결혼상태, 자녀의 나이 등

2) 일-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전이이론과 보상이론이 대표적이다.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은 전이의 방향에 따라 일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일로의 전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보상이론은 한 영역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영역에서 반대되는 경험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두 영역 사이의 관계를 부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생활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러한 불만을 가족생활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더 충실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고자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전이이론과 보상이론은 일과 가족 간의 관계를 정적인 것으로 보느냐, 부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그 차이점이 있지만, 두 영역 간의 상호성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서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여 일-가족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데에 그 공통점이 있다(김진희·한경혜, 2002, 재인용).

가정영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Grzywacz & Bass(2003)에 의하면 연령, 성, 노동시간과 결혼여부, 어린자녀 유무가 일-가족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가족요인의 양립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녀수 증가는 부부간의 성 분업적 역할을 강화시켜,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천이 된다.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족 양립 곤란의 주된 이유로는 자녀양육문제와 가사부담을 들고 있으며, 비취업여성의 대다수가 경제적 문제로 취업을 원하지만 일-가족 양립곤란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2005). 즉, 일가족 양립의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과 가정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못하며, 이 때문에 출산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주혜진, 2007). 충남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2003)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이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영향을 미친다'가 60.2%, '크게 영향을 미친다'가 28.4%로 나타나 88.6%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합한 비율은 11.4%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고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들의 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는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어 여성들로 하여금 위험회피적인 경향을 갖게 함으로써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leeboos, 2003).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심리적·생리적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역할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혜원·김명소(1998)의 연구에서는 직업의 지위, 임금, 피로 등이 심리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이미숙(2000)의 연구에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가 비취업이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에게 있어 취업유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차이, 일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출산과 일-가족요인에 관하여 자녀 출산이 일-가족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일-가족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녀출산과 일-가족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것이 앞선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안은진·박다운·한지은, 2009).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가족 요인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의 갈등이나 축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보다는 일-가족 상호작용을 하나의 일-가족요인으로 보고 출산계획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4.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

일이란 생계를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일정한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회활동을 의미한다. 인간은 일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하며, 또한 성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이상현·전영주, 2009). 한지숙(2007)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여 주5일제 실시, 여성인력의 증가 등으로 근로자들은 가정생활과 개인의 취미여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일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가정생활영향 갈등은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일-가족생활영향 촉진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지원, 2007). Voydanoff(2005)의 일-가족갈등과 촉진에 관한 연구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성이데올로기 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에 관한 김영선·옥선화(2005)의 연구에서는 직업만족도가 클수록 생활만족도 역시 커지며, 일-가족갈등은 직업만족도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진희·한경혜(2002)의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직업환경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요인은 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최초의 기본적인 사회화과정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하게 된다. Coleman & Ganong(1984)에 의하면 가족친밀성이 높으면 긍정적인 가족관을 갖는다고 하였고, 김명자(1984)의 연구에서도 결혼관, 성역할관, 효도관 등 대부분의 가족가치관이 부모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강은령(1989), 최규련(1984) 등은 부부의 대화만족도나 결혼만족도가 가족원의 성역할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hun, Chang & Chang(2004) 역시 전통적 사회적 가치와 성역할태도들은 가족을 통해 전이된다고 주장하였다. Booth, Alan, Amato & Paul(2004)은 부모가 비전통적인 성역할과 태도를 가진 경우 자녀들도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른다고 하였다. Wendy(1992)에 의하면 아버지의 존재가 자녀의 정서적 복지와 연관되는데, 아버지의 양육스타일에 따라 자녀의 외현, 내면적 문제행동과 학업능력이 결정되며,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과 많이 놀아주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사회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 등으로 가정의 기능이 마비되면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결혼관이 보다 더 근대적으로 나타난다(김제한, 1974).

한국사회에서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을 감소를 초래했다는 데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이삼식, 2007). 하나는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하여 출산행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확산되면서 자녀관, 결혼관, 성역할관 등에 있어 개인의 의식구조도 변하여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이었던 유교적 가치관에서 점진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가치관 자체가 변하여 출산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변화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출산행위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감소나 이혼을 증가와 같은 가족위기 징후는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내 부양기능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송다영, 200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가족요인은 가족가치관(결혼관, 자녀관)을 통하여 출산계획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그 외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국사회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소득 및 고용불안정, 주거 불안정, 연령, 교육수준 등으로 보고된다. 즉, 김혜순의 연구(1982)에 의하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Beets(1997)에 의하면 교육은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성희·이규식·조남훈·홍성열의 연구(1977)에서도 출산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향상, 교육수준 향상 및 결혼연령의 상승과 같은 변수로 나타났다.

Billari & Kohler(2004)에 의하면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적 전망은 부모의 집에 늦은 나이까지 머물게 하여 혼인연령을 상승시키고 출산율을 하강시키기 쉽다고 한다. 영국에서도 1970년대 초 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어 왔으며,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에 불경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회복지비용이 삭감되어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감소되었다는 것이다(Hoemh & Hoem, 1996).

장혜경(2005)의 연구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부담이 낮은 반면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저출산 국가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주거의 안정성 역시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된다. 높은 주택가격은 여성의 결혼연기 및 20-24세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셋째 이

상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의 증가 역시 출산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9)에 따르면 학부모의 70%가량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부담요인 중 58%가 각종과외비, 39%가 학교납입금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49만원으로 1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350만원의 58%를 차지하였다. 자녀양육비 증가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출산을 감소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장혜경, 2005). Atoh(1998)는 교육비 증가가 부모에게 지우는 부담이 크므로 부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일-가족요인은 출산계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가족가치관은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2-1. 결혼가치관은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2-2. 자녀가치관은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 간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의 평가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수립을 위하여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주요 내용은 만 20~44세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의 결혼·출산·양육관련 행태와 기존정책 만족도 및 새로운 정책 수요를 목적으로 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과 매우 부합되는 자료이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는 만 20~44세 기혼여성 및 미혼남녀 조사대상자에게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 응답자 238명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변수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일 요인과 가족요인 두 가지이다. 일 요인은 경제활동여부와 형태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주당 평균노동시간, 응답자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구성될 것이다. 가족요인으로는 취학전 자녀수, 출산 남아 수, 출산 여아 수, 자신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포함되었다.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사교육비 등을 포함하였다. 교육수준 변수는 범주형 변수로서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자녀출산 계획의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자녀출산계획 유무'변수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석대상의 자녀출산유무는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출산계획이 '있다', '없다'로 구성하였다.

3) 매개변수

(1) 결혼가치관

결혼관련 가치관을 묻는 문항은 총 2개 문항으로 ①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②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결혼응답 범주는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결혼관, 낮을수록 보수적 결혼관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819로서 높게 나타났다.

(2)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 총 3개의 문항으로 ①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③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등이 포함되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실용적 가치관을, 높을수록 비실용적 가치관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737로 나타났다. <표 1>은 변수에 대한 정의이다.

<표 1>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및 설문문항	정의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	단위(세)
		교육수준(d)	무학(기준),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월평균가구소득	단위(원)
		월평균사교육비	단위(원)
독립 변수	일요인	남녀 주당평균 근로시간	단위(분)
		남녀월평균 근로소득	단위(분)
	가족요인	취학자녀수	단위(명)
		자녀수	단위(명)
		남녀가사노동시간	단위(분)
매개 변수	결혼가치관 (신뢰도cronbach α 는 0.819)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 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의 4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결혼관, 낮을수록 보수적 결혼관을 나타낸다.
	자녀가치관 (신뢰도cronbach α 는 0.737)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 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 기도 하다	4점 척도 점수가 낮을수록 실용적 가치관을, 높을수록 비실용적 가치관을 나타낸다
종속 변수	출산계획의도	출산계획의도	있다, 없과의 이분변수

3. 분석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고 특히 종속변수가 출산 계획의 유무로서 이분변수이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우선적으로 이 두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

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후 마지막 단계에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을 투입하여 추가로 투입된 변수가 출산 계획 유무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지를 살펴보는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만일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두 변수가 출산 계획 유무에 대한 예측 확률을 높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이 이 두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 봄으로서 이들 변수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만일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변수를 추가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계획 유무의 예측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이지 못할 경우엔 매개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최종 분석에 포함된 238명의 기혼취업여성을 의미한다. <표 2>에 제시된 내용은 범주형 변수들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이다. 기혼여성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총 238명 중 32명(13.4%)에 불과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모든 여성은 취업 상태였다. 주택 소유 비율도 매우 낮았다(5.9%).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100명, 42.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년제 대학 졸업자(76명, 31.9%)였다.

<표 2> 범주형 변수별 빈도 및 퍼센트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유효	누적합계
출산계획	있음	32	13.4	100
	없음	206	86.6	
주택소유 여부	소유	14	5.9	100
	비소유	95	39.9	
	해당 없음	129	54.2	
취업 여부	취업 중	238	100	100
교육정도	중학교	2	0.8	100
	고등학교	100	42.0	
	4년제 미만 대학	53	22.3	
	4년제 대학	76	31.9	
	대학원 이상	7	2.9	

<표 3>의 내용은 주요 변수들과 관련된 기술 통계 결과이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96만 정도였으며 기혼여성 응답자 자신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6만원 정도였다. 이러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응답자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평균 시간은 43시간 25분 정도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평균 남아 수는 1.11명, 평균 여아 수는 0.83명, 그리고 총 출생자녀수 평균은 1.94명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5세였다. 부인의 주당 가사노동 평균 시간은 18시간 42분이었고,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 평균시간은 8시간 30분으로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남편에 비해 매우 높았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가구소득	238	100	3000	396.41	240.238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238	0	400	145.69	73.349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238	10	91	43.36	12.064
(총 출생자녀수)남아수	238	0	3	1.11	.701
(총 출생자녀수)여아수	238	0	4	.83	.825
(총 출생자녀수)총 출생자녀수	238	1	4	1.94	.669
조사대상기혼여성가구원사항-만연령	238	23	44	34.53	3.475
부인가사노동시간(분)	238	240.00	3600.00	1122.7731	537.49917
남편가사노동시간(분)	238	.00	1620.00	511.1765	335.28167
결혼가치관(낮을수록보수적)	238	2.00	8.00	4.7017	1.55872
실용적자녀관(낮을수록실용적)	238	3.00	12.00	7.4076	2.06790
유효수 (목록별)	238				

응답자의 결혼가치관은 중간 점 5점보다 약간 낮은 4.70으로 나타나 약간 보수적인 것임을 보였다. 실용적 자녀관은 중간 점 7.5보다 약간 낮은 7.41을 보여 약간 실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변수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변수별 상관관계

<표 4> 변수별 피어슨 상관계수

	(추가) 자녀 계획	월평균 가구소득	만연령	평균 근무시간/주	월평균근로 소득(만원)	사교육비 계	총 출생 남아수	총 출생 여아수	취학전 자녀수	부인가사노 동시간(분)	남편가사노 동시간(분)	결혼가치관	실용적 자녀관
(추가)자녀 계획	1												
월평균 가구소득	-.014	1											
만연령	-.319**	.056	1										
평균 근무시간/주	.084	.073	.047	1									
월평균근로소득(만원)	.059	.424**	-.005	.109	1								
사교육비 계	-.266**	.235**	.223**	.015	.172**	1							
총 출생 남아수	-.183**	.064	.119	-.146*	-.014	.026	1						
총 출생 여아수	-.174**	-.058	.117	.085	-.017	.266**	-.626**	1					
취학전 자녀수	-.055	-.106	-.201**	-.068	-.039	-.112	.048	.222**	1				
부인가사노동시간(분)	.051	-.029	-.085	-.114	-.072	-.084	-.005	.020	.182**	1			
남편가사노동시간(분)	.182**	.010	-.058	.005	.102	-.087	.007	-.132*	.002	.369**	1		
결혼가치관	.052	-.044	-.156*	-.038	.057	.041	-.048	.026	.005	.070	-.096	1	
실용적 자녀관	-.072	.022	.051	-.015	-.075	.080	.049	-.019	.073	.055	.089	-.213**	1

**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 .05 수준(양쪽)에서 유의. 1. 낮을수록 보수적. 2. 낮을수록 실용적

3. 가설검증을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최초 계획은 통제변수로서 주택소유여부, 불임진단여부를 통제변수로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결측값(무응답 내지 해당 무)이 2,020사례, 불임진단여부에 대한 결측값이 3,420사례가 되어 이들 결측값을 가진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됨으로써 전체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변수에서 제외했다. 투입된 통제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자녀양육비 등이다.

많은 결측값을 가진 일부 변수들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 중 결측값을 가진 변수들이 분석 사례에서 제외됨으로써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는 238사례에 불과했다. 이는 총 3,585 사례 중 6.6%에 해당되는 것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가 나머지 사례들(3,347 사례, 전체의 93.4%)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본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의 수가 많았고 종속변수가 양분변수여서 시간 상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되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인지하면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절편만 포함된 모형의 분류표

	실제 관측치	예측		분류정확 %
		(추가)자녀 계획		
		없다	있다	
0 단계	(추가)자녀계획 없다	206	0	100.0
	있다	32	0	.0
전체 퍼센트				86.6

<표 5>의 내용은 통제변수가 없고 절편만이 있는 기저모형 상태에서 출산계획 유무를 예측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 것을 나타낸다. 실제 사례에서 “출산계획 없음”은 전체 사례의 86.8%이고, “출산계획 있음”은 13.4%로서 “출산계획 없음”의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통제변수나 독립변수들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모두 “출산계획 없음”으로 예측하는 것이 이 상태에서 가장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계획 없음”이라고 예측했을 경우 적중률은 86.6%이다.

다음으로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분석의 첫 단계로 통제변수를 투입했다. 앞서 제시한 대로 이 때 투입된 통제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구소득, 자녀양육비 등이었다. 교육수준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더미 코딩을 하여 네 개의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다(기준변수는 ‘무학’). 따라서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에 비해 총

7개의 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이 때 기저모형의 -2Log 우도 값과 7개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1의 -2Log 우도 값의 차이 값인 카이제곱(χ^2) 값은 38.366(자유도=7, $p=.000$)로서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를 추가한 분석모형의 설명력이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분류표

실제 관측치		예측		분류정확 %	
		(추가)자녀 계획			
		없다	있다		
1 단계	(추가)자녀계획	없다	203	3	98.5
		있다	25	7	21.9
전체 퍼센트				88.2	

<표 6>의 내용은 통제변수가 투입된 상태에서 출산계획 유무를 예측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 것을 나타낸다. 실제 사례에서 “출산계획 없음”은 전체 사례의 86.6%이고, “출산계획 있음”은 13.4%로서 “출산계획 없음”의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한 사례가 210 사례로 증가되어 예측 적중률은 통제변수가 투입되기 전의 86.6%에서 1.6% 증가한 88.2%가 되었다.

<표 7> 방정식에 포함된 통제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단계	교육수준			.478	4	.976	
	중졸	.662	2.642	.063	1	.802	1.940
	고졸	.237	1.273	.035	1	.852	1.268
	대졸	-.130	1.319	.010	1	.921	.878
	대학원졸	.113	1.276	.008	1	.930	1.119
	가구소득	.001	.001	.556	1	.456	1.001
	사교육비	-.035	.011	9.888	1	.002	.966
	여성 나이	-.230	.065	12.645	1	.000	.795
	상수항	6.674	2.463	7.343	1	.007	791.430

각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Wald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사교육비($p=.002$)와 여성의 나이($p=.000$)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사교육비와 여성의 나이는 출산 계획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나 이 두 변수는 출산 계획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할수록 출산계획을 포기할 승산은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나이가 1세 증가할수록 출산계획을 포기할 승산은 2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계수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BIC 값(Wald - $\ln L$)을 산출해 보았다. 사교육비의 BIC 값은 4.42로서 '보통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다(Raftery, 1995). 여성 나이의 BIC 값은 6.99로서 '큰 효과크기'라 할 수 있다(Raftery, 1995).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요인은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이 일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들을 투입했다. 앞서 제시한 대로 이 때 투입된 독립변수는 기혼여성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기혼여성의 월평균 소득, 취학 전 자녀수, 남아 수(총 자녀수), 여아 수(총 자녀수), 주당 아내의 가사 노동시간(분), 주당 남편의 가사 노동시간(분) 등이었다. 통제변수가 투입됐던 1단계 모형에 총 7개의 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이 때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의 -2Log 우도 값과 총 14개 변수(통제변수 7개, 독립변수 7개)를 포함한 분석모형2의 -2Log 우도 값의 차이 값인 카이제곱(χ^2) 값은 75.895(자유도=14, $p=.000$)로서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들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분석모형 2의 설명력이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의 대상은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분석모형1의 설명부분을 넘어서 독립변수들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써 종속변수(출산 계획 유무)를 설명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모형1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분석모형2를 구성했으므로 분석모형1에 비해 분석모형2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분석모형1과 분석모형2의 -2Log 우도 값의 차이 값인 카이제곱(χ^2) 값은 37.259(자유도=7, $p=.000$)로서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에 추가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8>의 내용은 통제변수에 더하여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상태에서 출산계획 유무를 예측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 것을 나타낸다. 통제변수에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한 사례가 215 사례로 증가되어 예측 적중률은 통제변수에 독립변수가 투입되기 전의 88.2%에서 2.1% 증가한 90.3%가 되었다.

<표 8> 통제변수에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분류표

	실제 관측치		예측		분류정확 %
			(추가)자녀 계획		
			없다	있다	
2 단계	(추가)자녀	없다	200	6	97.1
	계획	있다	17	15	46.9
전체 퍼센트					90.3

분석모형2에 포함된 각 변수의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Wald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앞서 살펴본 통제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진단은 생략하고 추가로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만을 살펴보았다. 남아 수($p=.000$), 여아 수($p=.000$),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분)($p=.044$)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도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수, 딸의 수, 그리고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분)은 출산 계획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나 아들과 딸의 수는 출산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기존에 출산한 아들의 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출산계획을 포기할 승산은 9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에 출산한 딸의 수가 한 명 증가할수록 출산계획을 포기할 승산은 9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1분 증가할 경우 기혼여성이 출산을 계획할 승산은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개의 계수들의 효과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BIC 값($Wald - \ln N$)을 산출해 보았다. 남아 수와 여아 수의 BIC 값은 각각 8.50, 6.74로서 '큰 효과크기'라고 할 수 있으며,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의 BIC 값은 -1.41로서 '아주 미미한 효과크기'라 할 수 있다(Raftery, 1995).

〈표 9〉 방정식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1단계 (통제 변수)	교육수준		1.559	4	.816		
	중졸	-.779	3.123	.062	1	.803	.459
	고졸	-.197	1.566	.016	1	.900	.821
	대졸	-.941	1.629	.334	1	.564	.390
	대학원졸	-.714	1.548	.213	1	.645	.490
	가구소득	-.001	.002	.190	1	.663	.999
	사교육비	-.016	.013	1.349	1	.245	.985
	여성 연령	-.209	.075	7.726	1	.005	.811
2단계 (독립 변수)	평균노동시간/주	.041	.022	3.577	1	.059	1.042
	월평균소득(여성)	.000	.004	.012	1	.912	1.000
	취학전자녀수	1.404	.938	2.241	1	.134	4.072
	남아 수	-3.251	.870	13.973	1	.000	.039
	여아 수	-3.072	.879	12.219	1	.000	.046
	부인가사노동시간	.000	.001	.494	1	.482	1.000
	남편가사노동시간	.002	.001	4.062	1	.044	1.002
	상수항	7.460	3.412	4.781	1	.029	1736.565

다음으로,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분석의 세 번째 단계로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에 더하여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변수들을 투입했다. 앞서 제시한 대로 이 때 투입된 매개변수는 결혼 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었다. 통제변수 7개와 독립변수 7개가 투입됐던 분석모형2에 총 2개의 변수가 추가로 투입된 셈이다. 이 때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의 -2Log 우도 값과 총 16개 변수(통제변수 7개, 독립변수 7개, 매개변수 2)를 포함한 분석모형3의 -2Log 우도 값의 차이 값인 카이제곱(χ^2) 값은 77.712(자유도=16, p=.000)로서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에 매개변수를 추가한 분석모형3의 설명력이 절편만 있는 기저모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의 대상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을 투입한 분석모형2의 설명부분을 넘어서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변수들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써 종속변수(출산 계획 유무)를 설명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모형2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모형3을 구성했으므로 분석모형2에 비해 분석모형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분석모형2와 분석모형3의 -2Log 우도 값의 차이 값인 카이제곱(χ^2) 값은 1.817(자유도=2, p=.403)로서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에 추가된 매개변수들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들에 더하여 매개변수들이 투입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사례가 215 사례로 2단계에 비해 증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측 적중률도 90.3%에 머물러 있다.

<표 10>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에 매개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분류표

	실제 관측치		예측		분류정확 %
			(추가)자녀 계획		
	(추가)자녀 계획	없다	없다	있다	
3 단계	없다	199	7	96.6	
	있다	16	16	50.0	
전체 퍼센트				90.3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들을 1단계로 투입한 후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을 2단계로 투입하여 통제변수들의 영향력만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출산 계획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즉, 통제변수들의 설명부분(분석모형1)을 넘어서 매개변수로 추정되는 변수들이 새롭게 투입됨으로서(분석모형2) 종속변수(출산 계획 유무)를 설명하는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1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분석모형2를 구성했으므로 분석모형1에 비해 분석모형2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는지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분석모형1과 분석모형2의 -2Log 우도 값의 차이 값인 카이제곱(χ^2) 값은 2.721(자유도=2, p=.256)로서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수에 추가된 매개변수들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 더하여 매개변수들이 투입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사례도 오히려 1 사례가 줄어들어 출산 계획 유무를 예측하기 위해 통제변수에 더하여 매개변수를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변수로 추정했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은 기혼여성의 출산 계획 유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가치관은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일-가족요인이 자녀출산계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에 대한 가족가치관(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가족요인과 가족가치관을 이해하고 저출산문제의 정책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취업한 기혼여성 응답자 중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총 238명 중 32명(13.4%)에 불과했다. 즉, “출산계획 없음”은 전체 사례의 86.8%이고, “출산계획 있음”은 13.4%로서 “출산계획 없음”의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으로 추가 자녀출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월평균 사교육비와 여성의 연령은 출산 계획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와 여성의 나이는 출산 계획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교육비가 출산계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장혜경,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는 경제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녀수의 수보다는 질에 중점을 두게 되며(Atoh,1999), 현대 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을 원하고 이는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성의 연령 역시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산계획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을 저하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여성의 연령이 증가한다면 가임기간이 짧아져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출산계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가 늘게 되어 출산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학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다고 본다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임금상승은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보이게 되어 이론적으로 교육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없다(김우영, 2007)는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가족요인인 아들의 수, 딸의 수, 그리고 일요인인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출산 계획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자녀수는 출산 계획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력 감소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직접비의 상승과 동시에 진행되어 왔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에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경우 기혼여성이 출산을 계획할 의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내에서의 가사분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최근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 돌봄 노동이나 가사분담은 남성이 여성과 함께,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자리메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부인이 전담한다거나 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맞벌이의 경우조차도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길어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통계청, 2008). 즉, 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역할분담'에 의해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을 모두 담당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일-가족요인이 사회적으로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가사와 양육의 파트너인 남성에게서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여성의 선택은 가장 방어적인 형태, 즉 출산파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수미, 2005). 이러한 역할가치관의 불평등 정도가 큰 사회일수록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분담 경우처럼 가족 내 공평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때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라는 가족가치관이 출산계획의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요인과 출산계획의도 간 매개효과가 없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 있어 분석자료의 가장 큰 결함은 3,800여개의 사례 중 283사례만 본 분석에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이 결측값을 갖고 있는데, 변수와 변수들의 조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례의 한 변수에서 결측값이 발견되면 다른 변수가 결측값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 사례가 분석에서 제외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 본다면 일-가족요인과 출산문제에 있어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의 매개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족요인과 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가치관을 강조하는 방법 이외의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하위개념을 달리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과 관련하여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계획의도를 살펴보고 일-가족요인, 가족가치관, 출산계획의도 간의 관계

를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는 가족가치관의 일-가족요인과 출산 간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출산력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일-가족 요인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으며 특히 일-가족요인의 갈등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분석자료의 결측치가 너무 많아 많은 사례들이 분석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패널자료의 차수가 누적되어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숙경 · 고정자. 1996.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85-95.
- 강은령. 1989.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용은 · 김의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21-226.
- 김명자. 1984.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인식 변용에 관한 연구. 관동대 논집 8집, 453-470.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 김우영. 2007. 여성의 추산과 경제활동참 결정요인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발간자료.
- 김태현. 2005. 가치관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호. 16-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신. 1998.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 간 유사성, 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 2010. 한국여성과 재미한인여성의 가족가치관 비교연구-코호트 및 개인사분석을 통한 지속과 변화탐색. 한국가족관학회지, 15(1), 271-296.
- 김경신 · 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기연 · 신수진 · 최혜경. 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 활동. 한국가정학회지. 21(3), 87-99.
- 김성희 · 이규식 · 조남훈 · 홍성열. 1977.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용인분석, 가족계획연구원.
- 김승권. 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86호. 6-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 김민자. 2003. 저출산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 최병호.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선 · 옥선화. 2005. 가족기업 종사자의 일-가족갈등 및 직업만족도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23-45.
- 김제한. 1974. 가정환경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진희 · 한경혜. 2002. 남성과 여성의 일 · 가족전이와 관련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0(11).

- 김태현. 2005. 가치관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호. 16-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순. 1982. 한국부인의 이상자녀수 감소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디어다음. 2010.06.16.
- 박병일. 2004. 한국의 출산력 저하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 2007. 사회적 지원이 일-가정생활영향 상호관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 2006.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 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I. 서울:교문사.
- 방은령·신효영. 2006. 결혼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 한국심리학회지 2, 326-329.
- 손승영. 20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 가족관계의 변화. 동덕여성연구 10, 5-25.
- 송다영. 2005.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25-251.
- 안은진·박다운·한지숙. 2009. 기업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시행과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가족 갈등이 자녀출산계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패널 발표논문.
- 양명숙. 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연구-대전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8. '장시간 일해야 한다'는 통념을 버려: 일과 가족생활 양립. 영국의 직장문화 개성사례, 2008.9.3. 기사.
- 유계숙·유영주. 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5), 82-97.
- 유계숙·한지숙·안은지·최효진. 2007. 가족친화기업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근로자와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뉴패러다임센터.
- 유영주·김경신·김순옥. 2000. 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 은기수. 2001. 현대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 및 이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학회대회 발표논문.
- 이병렬. 2003.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기획논문, 12월, 국회도서관보.
- 이삼식. 2007.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6-140.
- 이삼식·조남훈. 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 신인철 · 조남훈.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현 · 전영주. 2009. 미혼여성의 일-가족 용인과 가족가치관의 관계연구.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숙현. 2005. 기업의 가족의 상호관련성, 가족과 기업, 신정출판사. 21-38.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저출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 장지연. 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호, 45-55.
- 장혜경. 2005. 외국의 저출산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42(12), 13-23.
- 정옥분 · 정순화 · 김경은 · 박연성. 2007. 가족가치관과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15-249.
- 조소연 · 오윤자. 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 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271-284.
- 조아라. 2005. 저출산대책 마련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혜진. 2007.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장기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91-100.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저출산정책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12.
- 최숙희 · 김정우. 2006. 획기적인 출산을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최현수. 2005. 저출산시대의 여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8. 출생. 혼인. 이혼통계.
. 200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한지숙. 2007. 근로자의 성역할태도와 일-가족지향성이 일-가족갈등 및 촉진과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toh, M. 1998.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in Relevanc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PPRC, The Mainichi Shimbun, 117-150.
- Altucher, A.K.A. 2001. Changing lives, changing plans: work, fertility intentions and voluntary childlessness.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Beets, G. 200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eing of First

- Birth:Primarily F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 Billari, F.& H.P.Kohl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ooth, A., Amato, P.R. 2004. Parental gender role nontraditionalism and offspring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865.
- Chin-Chun, Chin-Fen Chang, Ying-Hwa Chang. 2004.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alue:A Comparison between Teenagers and Parents and Parents in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5(4), 523-545.
- Fredricksen-Golden, K.I., & Scharlach, A. E. 2001. *Families and Work:New direc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nong, H, & Coleman, M. 1984. Marital Conflict in Family, Youth and Society 19, 151-172.
- Gillis, J.R., L.A., Tilly, and D., Levine. 1992. *The European Experience of Dealing Fertility: a Quite Revolution 1850-1970*. Oxford: Basil Blackwell.
- Greenhaus, J.H., Collins, K.M., & Shaw, J.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 510-531.
- Grzywacz, J.G., & Bass, B.L. 2003. Work, family and mental health:Testing different models of work family fi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5, 248-262.
- Higuchi, Y. 2001. Woman's employment in Japan and the timing of marriage and childbirth.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57(2). 156-183.
- Hoem, B. & J.M. Hoem. 1996. Sweden's family politics and roller-coaster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2(3-4), 1-22.
- Hoffman, L.W., & Hoffman, M. 1973.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James 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Basic Books, 19-26.
- Kagitcibasi, C. 1982. The changing value of children in Turkey, *Library of Congress*.
- Kwon, Y.E., Park, Y.S., & Kim, U. 2001. Value of children in different generation of Korean women, 4th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nnual

- Conference, Melbourne, Australia.
- Rabin, L. 1965. The Generation Gap: wearing it well. *The time* Jul, 29.
- Raftery, A. E. (1995).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ocial research. In P. V. Marsden (Ed.),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25, pp. 111-163). Oxford: Basil Blackwell.
- Richer, K. ET AL.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4). 651-661.
- Sabatier, C., & Bison, G. 2002. Value of Children in France. The 25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 Saleebos, J.E.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 Trommsdorf, G., Zheng, G., & Tardif, T. 2000.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cultural context. In P. Boski(Ed.), *New directions in cross-cultural research*. Warsaw, Poland:Polish Academy of Sciences.
- Wendy S. 1992. Fathers' work experiences and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school competencies,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 Voydanoff, P. 2005. Social Integr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Job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66-182.

**미혼자의 일과 가족환경특성에 따른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과
결혼-출산정책에 대한 영향력 및 정책개발**

정민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미혼자의 일과 가족환경특성에 따른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과 결혼-출산정책에 대한 영향력 및 정책개발

정민자 교수(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3명에 비해 크게 낮은 1.15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이다. 특히, 저출산 연령인 20-34세의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는 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1980년 84.9%에 달했으나 1990년 77.3%, 1995년 69.9%, 2000년 59.1%로 계속 감소했다. 특히 2005년에는 40.1%로 5년 사이 20%포인트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30~34세 여성의 유배우 비율도 같은 기간에 급감했다. 1980년 94.3%였던 유배우 비율은 2000년에 86.9%를 기록, 90%이하로 떨어지더니 2005년에는 78.2%까지 하락했다. 반면 미혼율은 급증했다.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80년 14.1%였으나 2005년에는 59.1%까지 뛰었다. 30~34세 여성의 미혼율 역시 같은 기간 2.7%에서 19.0%로 증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9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결혼의 필요성은 더욱 낮아져 저출산 고령사회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의 변화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든다면 남성의 경우는 반드시 해야만 다가 21.3% 여성의 경우는 16.9%로 정도로 가변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결혼 연령도 남성은 2005년(남성연령) 30.57세에서 2009년에는 31.76세, 여성은 2005년 남성연령 31.34에서 31.92 세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

은 2005년 남성은 27.60세에서 28.94세, 여성은 28.94에서 29.45세로 갈수록 만혼적인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곧 저출산의 주요원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는데, 통계청은 한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로 ① 미혼 비율 증가와 유배우(有配偶) 비율 감소 ②결혼 및 자녀관 약화 ③일과 양육 양립의 어려움④소득·고용 불안 및 양육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를 시계열로 한 조명덕(2009)의 연구에서는 실질 경제성장률과 출산율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며, 출산율의 부적 효과를 갖는 변수로는 실질 GDP,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교육비부담, 초혼연령의 상승, 경제위기의 발생, 청년실업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등을 들 수 있고, 정(正)의 효과를 주는 변수로는 보육시설 수, 교육수준의 향상, 정부의 강력한 저출산 대책의 시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를 주문하면서, 다양한 정책 중에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의 활성화와 결혼저벽기에 들어선 청년의 즉각적인 취업대책과 청년들을 결혼을 유도하여 초혼연령을 낮추는 이른바 결혼지원정책이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주거문제, 전세값을 비롯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어 청년의 직장과 주거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풍조가 사라지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혼 후에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직장문화가 정립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하수 있고, 전업주부도 둘째 아이를 기꺼이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출산, 보육, 양육 인프라가 확립되어 자녀양육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도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의 정립되어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의 해소, 낙태, 및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함을 제시한다.(조명덕, 2009, 이상림, 2010)

이외에도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으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없는 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모건, 2010 생명포럼)이라고 한 주장이나, 고용, 경제활동 등의 경제사회제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의 미혼자들은 결혼시장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결혼의 선택이 어려워져, 만혼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져, 저출산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으로 초혼연령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박영숙(2008)은 인간개발원연구원 포럼에서 “ 유럽은 1960년부터 인구가 소멸하기 시작하였으며, 40년간 인구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농경사회 산업사회에서는 자녀가 재산이었으나,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아이는 비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념을 변경해야 함을 제안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제적 지원은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나 저출산을 지속적으로 극복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홍보활동 등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지속적인 변화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신효영, 방은령. 2008 재인용)

‘우리나라 저출산현황과 그 요인(조복희, 2009)의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요인으로 급격한 만혼화에 따른 가족재생산 시기가 지연되는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소득 불안정-> 결혼연기.출산축소-> 출산율의 급감의 경제적 요인->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이때 사회적 요인이라 ①결혼 및 자녀가치관 ② 과중한 육아 부담 인식③일과 가정의 양립 부담 때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결혼및 자녀가치관 결혼에 대한 긍정성은 여전히 높으며, 이상 자녀 수를 2.3명(육아정책 개발센터, 2008)으로 조사되어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라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긍정적 신호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정연숙,2005)에서는① 가정 친화적 가족정책(가족생활주기별 건강관리체계구축.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강화) ②양성평등적 양육지원정책(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아동양육을 위한 부성휴가제 도입육아휴직기간의 아버지할당제도입, 직장보육시설의 지원확대) ③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정책 (아동수당제도 도입, 세금제도 개선,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보육제도의 개선) 을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결혼 출산,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성향이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미혼자 뿐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이들에게 가족, 결혼, 출산 등에 관한 긍정적 가치 선호성을 위한 가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다행히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나 경제계 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포럼이나 학술대회 외에도 2010년 서울 송파구 구청장은 전 공무원들이 매주 포럼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104개의 아이디어 개발과 실제로 탄력 근무제 등을 실천하여 다른 구보다 자녀출산율을 높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생리적·의료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출산을 결정하는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환경과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가치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 문제로(유계숙, 2007). 인식하고 다양한 해법을 찾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혼비율의 증가와 유배유자율의 감소, 결혼관 자녀관의 약화는 한국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영향력 등을 분석하여 결혼지원이나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개발을 통해 출

산을 제고가 가능한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인 가족과 결혼 및 자녀가치관은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과,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구조의 변화, 교육·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사회참여욕구 증대 등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가족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혼인연령의 상승, 미혼 인구의 증가, 이혼 증가,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양경희, 2004). 오늘날의 가족가치관은 부권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관에서 민주적인 평등한 가족을 지향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2005) 또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과거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결혼관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 형태로써의 결혼관으로 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공세권, 1990).

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미정, 2010)에서 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41.8%,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50.8%의 응답률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59.2%,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을 해야 한다. 60.6%,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90.1%라는 응답률을 볼 때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지영(2006)의 연구에서는, 장래에 결혼을 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 30~32세로 52%가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봐도 30~32세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한곤(2005)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91%가 '결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결혼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에 대해서 48%가, 장래 결혼 생활 전망에 대해 76%가 행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 반면 2.7%만이 불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가 결혼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의 직장생활이 여성의 결혼기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71%가 응답을 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라도 결혼시기를 57%가 늦출 것이며, 결혼 후 여성이 가사와 사회생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64%가 응답하였다.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경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데, 1991년, 1997년, 2000년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공세권 외, 1992; 조남훈외 1997; 김승권외, 2000). 최근 2009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9)에서는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한다'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 21.6%, 여성의 경우는 20.3%로서 급감하였고, '없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이 남성이

12.9%로, 여성이 14.6%로서 나타나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점차 하락하여 이는 자녀출산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출산의향은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비율이 24.2%, '가능한 가지고 싶다'는 62.2%로 나타나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면 86.4%는 자녀출산에 대한 희망적인 욕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한다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면 '출산파업'을 굳이 하지 않을 것이며, 이상적인 자녀수 2명(평균 1.9명)을 출산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녀가치관의 변화요인은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효율적인 산아제한 활용, 여가생활이나 쾌락적 가치추구, 개인생활의 중시 등으로 결혼 후 자녀출산에 대하여 시기를 미루거나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자녀출산에 대한 전통적 규범은 약해지고 이에 비해 개인적, 실용적 가치가 더 중시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양명숙, schvaneldt, 1996에서 재인용). 이처럼 가족 및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혼연령 상승과, 포기, 출산포기로 이어져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최미정, 2010)

한편 결혼 또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에스더(2007)의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 혹은 축하금 지원정책이 도움이 되는 정도가 49%로 현물급여에 대한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원의 정도가 일회성이라 장기적인 효과 부분에서는 미미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자녀보육료 지원에서는 첫째 아이부터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30만원 이하가 79%로 응답이 가장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산후도우미 지원정책에서는 8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정책에 95%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권형례(2009)의 가임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별 현행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바 출산준비교실운영 및 자녀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임신부 영양제 지원 사업,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사업, 신생아 보건소 이용안내사업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임연령 미혼남녀 간의 현행 출산장려정책 중 일정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지원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하에 적극적인 경제 지원 정책으로 출산비용과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혜선(2007) 연구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로 조사된 자녀에게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재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오정균(2007)의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과거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최소화시키면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주장한다.

한편 중앙정부가 저출산고령화기본 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로 결혼 및 출산양육지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지원정책으로는 신혼부부 무료건강 검진, 무료결혼식, 예비부부교육, 맞선 주선 등과 출산과 관련된 지원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축하금)지급, 출산용품 제공, 신생아 보험지원, 산후도우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출산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은 주로 출산장려금(축하금) 또는 출산용품 지원을 추진하였는데, 출산장려금(축하금)은 11개 광역 및 149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철분제(영양제)지급 132개 지자체, 다자녀가정양육지원 97개,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78개 순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자녀양육 관련 지원시책으로는 다자녀 가정양육 지원금,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보육 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가정 대중교통 요금할인,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우선창구 운영, 육아정보 미니도서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혼자들의 개인특성과 가족환경이나 일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의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을 알아보고, 그들이 원하는 결혼지원정책 요구와 양육지원정책의 요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혼 및 양육지원정책의 영역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책개발의 방향과 전략적 순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미혼자들의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라 가족관의 차이가 있는가?
2. 미혼자들의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라 결혼관은 차이가 있는가?
3. 미혼자들의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라 자녀가치관은 차이가 있는가?
4. 미혼자들의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라 결혼지원영역, 자녀양육지원영역은 어떠한 양상인가?
5. 결혼지원정책요구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가?
6. 자녀양육지원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의 정의는 원자료 조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관하여 바람직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화되고 조직화된 관념 체계로써, 가족에 관한 포괄적인 태도로서 결혼, 이혼, 자녀, 동거, 가족 내 성역할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박혜인, 1990)

여기서는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결혼과 가족에 태도로서 개인과 가족관계의 우선성, 이혼에 대한 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 입양, 재혼, 동거, 혼전 성, 미혼과 자녀 등으로 하위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2) 결혼관

결혼에 대한 선호가치 내지 태도로서 결혼의 필요성, 만혼의 이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등에 찬성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또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태도를 구성하고 있다.

3) 자녀가치관

자녀의 필요성의 정도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자녀의 가치, 가계 계승과 자녀, 노후와 경제적 가치, 무자녀 가치 등으로 구성하여 포괄적인 자녀가치관을 포함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변인		N	%
성별	남자	1,745	52.7
	여자	1,569	47.3
	합계	3,314	100.0
연령	20~24	1,449	43.7
	25~29	1,087	32.8
	30~34	446	13.5
	35~39	222	6.7
	40~44	110	3.3
	합계	3,314	100.0
학력	고졸이하	737	22.2
	대졸이상	2,577	77.8
	합계	3,314	100.0
종교	불교	635	19.3
	기독교	970	29.5
	무교	1680	51.1
	합계	3285	100.0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비동거	637	19.2
	동거	2677	80.8
	합계	3314	100.0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수혜 여부	전혀 도움받지않음	1244	37.8
	50%미만 도움 받음	397	12.1
	50%이상 도움 받음	312	9.5
	전적으로 도움받음	1327	40.5
	합계	3280	100.0
형제순위	첫째	1755	53.7
	둘째	1111	34.0
	셋째~일곱째	403	12.3
	합계	3269	100.0
부모님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3065	92.7
	있다	243	7.3
	합계	3308	100.0
형제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3146	96.2
	있다	123	3.8
	합계	3269	100.0

<표 1> 계속

	변인	N	%
취업여부	비취업	1313	39.6
	취업	2001	60.4
	합계	3314	100.0
종사자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145	8.7
	36~44시간 미만	543	32.4
	45~60시간 미만	912	54.5
	61시간 이상	74	4.4
	합계	1674	100.0
종사자 소득	100만원 미만	187	10.1
	100~150만원 미만	519	28.1
	150~200만원 미만	527	28.5
	200만원 이상	616	33.3
	합계	1849	100.0
종사자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352	18.0
	사무직	778	39.8
	서비스,판매업	618	31.6
	생산단순노무직	206	10.5
	합계	1954	100.0
종사자 지위	비임금근로자	142	7.2
	임시일용직	486	24.8
	상용직	1333	68.0
	합계	1961	100.0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9년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만 20-44세 미혼자 331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남성은 1745명(52.7%), 여성은 1569명(47.3%)이었으며, 연령은 20~24세가 1449명(4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5~29세 1087명(32.8%), 30~34세 446명(13.5%), 35~39세 222명(6.7%), 40~44세가 110명(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2577명(77.8%)으로 고졸이하 737명(22.2%)보다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1680명(51.1%)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불교와 기독교가 각각 635명(19.3%), 970명(29.5%)이었다.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은 2677명(80.8%), 동거하지 않는 미혼은 637명(19.2%)이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수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움 받는다 1327명(40.5%), 전혀 도움받지 않는다 1244명(37.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순위는 첫째가 1755명(53.7%)으로 대다수였으며, 둘째가 1111명(34.0%)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여부와 형제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여부 모두 없다가

각각 3065명(92.7%), 3146명(96.2%)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관해서는 취업이 2001명(60.4%)으로 비취업 1313(39.6%)보다 높았으며, 종사자 근무 시간은 45~60시간 미만이 912명(54.5%)으로 가장 높았고 36~44시간 미만이 543명(32.4%)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200만원 이상, 150~2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순으로 각각 616명(33.3%), 527(28.5%), 519명(28.1%)으로 나타났다. 직종에 관해서는 사무직이 778명(39.8%), 서비스·판매업이 618명(31.6%)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직종에 대해서는 상용직이 1333명(68.0%)으로 가장 높았고, 임시 일용직과 비임금 근로자는 각각 486명(24.8%), 142명(7.2%)로 나타났다.

2.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원데이터에서 활용가능한 문항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였는데,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가족환경특성으로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님의 경제수혜여부, 출생순위,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재혼경험여부,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경험여부, 일(근무)특성으로는 취업경험유무, 근로시간, 근로소득, 직종 종사자 지위로 구성하였다.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 결혼지원정책요구도, 자녀양육지원정책요도, 결혼지원정책 영역, 자녀양육지원정책 영역 등을 분석하기 위해

SPSS17.0으로 분산분석, 회귀분석, 카이 검증 등의 통계분석을 연구문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중 가족관의 경우 부부역할태도문항과 가족관의 일부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열린 태도로 해석한다, 결혼관과 자녀가치관 역시 역점수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로 해석된다, 자녀가치관의 경우도 자녀선호에 대해 가치가 개방적이고 선택적이며 부모로서 독립된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결과 분석

1. 개인, 가족환경 특성, 일 특성에 따른 가족관

〈표 2〉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른 가족관

변인	부부 역할 태도		가족에 관한 견해		가족관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2.45	.35	2.63	.46	2.54	.29
	여자	2.54	.38	2.63	.46	2.58	.30
	F값	44.816***		.105		15.007***	
연령	20~24	2.51	.39	2.64	.47	2.58	.30
	25~29	2.49	.36	2.62	.46	2.55	.29
	30~34	2.46	.34	2.63	.47	2.54	.28
	35~39	2.47	.38	2.64	.42	2.56	.30
	40~44	2.44	.33	2.65	.50	2.55	.29
	F값	2.316		.562		1.596	
학력	고졸이하	2.45	.36	2.64	.47	2.54	.29
	대졸이상	2.50	.37	2.63	.46	2.57	.29
	F값	15.459***		.424		3.679	
종교	불교	2.45	.36	2.62	.46	2.55	.29
	기독교(개신교·천주교)	2.50	.37	2.64	.45	2.57	.29
	무교	2.50	.35	2.63	.47	2.56	.29
	F값	.682		.426		.980	
현재 부모님과의 동거여부	비동거	2.47	.37	2.70	.45	2.59	.29
	동거	2.50	.36	2.61	.46	2.56	.29
	F값	2.574		17.502***		5.314*	
부모님으로부터의 경제적 수혜 여부	전혀 도움받지않음	2.49	.37	2.63	.44	2.56	.29
	50%미만 도움 받음	2.46	.37	2.65	.45	2.55	.29
	50%이상 도움 받음	2.52	.38	2.65	.51	2.58	.32
	전적으로 도움받음	2.50	.35	2.62	.47	2.56	.28
F값	1.963		.596		.801		
형제순위	첫째	2.49	.36	2.63	.47	2.56	.29
	둘째	2.50	.38	2.64	.47	2.57	.29
	셋째~일곱째	2.48	.37	2.60	.41	2.54	.29
	F값	.395		.697		1.070	
부모님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2.49	.36	2.63	.46	2.56	.29
	있다	2.49	.39	2.63	.48	2.56	.33
	F값	.000		.005		.004	
형제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2.51	.37	2.66	.45	2.58	.29
	있다	2.36	.34	2.69	.45	2.53	.28
	F값	17.766***		.619		4.110*	

<표 2> 계속

변인	부부 역할 태도		가족에 관한 견해		가족관		
	M	SD	M	SD	M	SD	
취업여부	비취업	2.50	.37	2.63	.47	2.56	.29
	취업	2.49	.36	2.63	.45	2.56	.29
	F값	1.014		.344		.037	
종사자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2.51	.37	2.61	.45	2.56	.30
	36~44시간 미만	2.49	.36	2.62	.45	2.55	.29
	45~60시간 미만	2.47	.35	2.65	.45	2.56	.29
	61시간 이상	2.44	.35	2.57	.44	2.51	.28
	F값	.669		1.161		.850	
종사자 소득	100만원 미만	2.51	.40	2.60	.47	2.56	.30
	100~150만원 미만	2.50	.37	2.61	.45	2.55	.29
	150~200만원 미만	2.48	.34	2.67	.45	2.58	.28
	200만원 이상	2.49	.35	2.64	.47	2.57	.29
	F값	.368		1.847		.515	
종사자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2.50	.39	2.57	.47	2.53	.32
	사무직	2.50	.35	2.66	.45	2.58	.29
	서비스,판매업	2.46	.35	2.67	.45	2.57	.28
	생산단순노무직	2.47	.38	2.54	.45	2.51	.29
	F값	1.582		6.875***		4.709**	
종사자 지위	비임금근로자	2.41	.36	2.70	.47	2.55	.31
	임시일용직	2.51	.37	2.62	.45	2.56	.29
	상용직	2.49	.36	2.63	.45	2.56	.29
	F값	4.298*		1.635		.083	

*p <0.05, **p <0.01, ***p <0.001

미혼자들의 개인 특성에서 여성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관과 열린 가족관을 갖고 있다. 연령이나 종교에서 차이가 없다.

가족환경특성별로 보았을 때, 부모와 동거를 할 때, 형제자매의 이혼 별거, 재혼등의 경험이 없을수록 가족가치관은 비교적 평등하고 열린 가치를 갖고 있다. 일(근로)특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낮을수록, 직종이 고위(관리)전문직 사무직인경우가 평등부부가치를 갖고 있으며, 가족가치관도 고위전문직 서비스판매직일수록, 지위에서는 상용직, 임시일용직일수록 민주적이고 열린 가족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본다면 미혼자들의 경우 가족관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미약한 차이가 일부 나타나는 것은 부부역할 태도에서 여성들과 학력수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형제자매들의 가족과정이 없을수록 직종이 전문직 사무직일수록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임시일용직일 때, 성역할분리의식이나

남편보다 아내의 돌봄노동, 취업 중에서도 자녀관계 유지가능성, 생계의 공유의식, 아버지의 육아참여 등에 있어 평등적인 가치를 가져야 함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결혼의 개인성, 부부갈등시의 이혼가능, 자녀가 있어도 이혼가능, 한부모의 가능성, 미혼부모의 가능성, 입양에 대한 열린 가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열린 가치, 동거에 대한 열린 가치, 혼전성의 허용 등에 대해서 열린 가치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체로 평균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점과 평균점수가 4점 만점에서 평점 2.9-3.0 대를 이루어 대체로 찬성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결혼관

<표 3>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결혼관

변인	결혼가치관		만혼가치관		결혼만혼가치관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2.94	.77	2.04	.41	2.48	.45
	여자	2.79	.75	1.97	.40	2.37	.44
	F값	32.846***		25.715***		49.476***	
연령	20~24	2.94	.76	2.01	.40	2.46	.44
	25~29	2.91	.74	2.02	.40	2.46	.44
	30~34	2.83	.77	1.98	.43	2.39	.46
	35~39	2.54	.76	1.97	.44	2.24	.47
	40~44	2.33	.75	2.04	.42	2.19	.47
	F값	26.699***		1.538		21.828***	
학력	고졸이하	2.77	.81	2.01	.43	2.38	.48
	대졸이상	2.90	.75	2.01	.40	2.44	.44
	F값	15.693***		.037		10.760**	
종교	불교	2.87	.79	2.04	.40	2.45	.46
	기독교(개신교·천주교)	2.91	.75	1.97	.41	2.43	.45
	무교	2.85	.76	2.02	.41	2.42	.45
	F값	1.885		7.255**		.849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비동거	2.79	.79	2.00	.42	2.39	.47
	동거	2.89	.76	2.01	.40	2.44	.44
	F값	8.370**		.192		5.189*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수혜 여부	전혀 도움받지않음	2.81	.78	2.01	.42	2.41	.46
	50%미만 도움 받음	2.85	.74	2.04	.38	2.44	.43
	50%이상 도움 받음	2.97	.77	2.04	.42	2.48	.45
	전적으로 도움받음	2.91	.76	1.99	.40	2.44	.45
	F값	5.244**		2.087		2.909*	

*p <0.05, **p <0.01, ***p <0.001

<표 3> 계속

변인		결혼가치관		만혼가치관		결혼만혼가치관	
		M	SD	M	SD	M	SD
형제순위	첫째	2.89	.78	2.01	.40	2.44	.45
	둘째	2.85	.74	2.01	.41	2.42	.44
	셋째~일곱째	2.81	.80	2.03	.42	2.41	.49
	F값	2.232		.403		1.200	
부모님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2.88	.76	2.01	.41	2.44	.45
	있다	2.67	.85	2.00	.44	2.32	.50
	F값	16.242***		.028		14.420***	
형제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2.84	.73	2.04	.42	2.43	.45
	있다	2.56	.78	1.96	.42	2.24	.48
	F값	16.585***		4.138*		21.988***	
취업여부	비취업	2.92	.75	2.00	.41	2.45	.44
	취업	2.84	.77	2.01	.41	2.41	.45
	F값	9.013**		.092		5.641*	
종사자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2.72	.79	2.02	.39	2.35	.46
	36~44시간 미만	2.88	.76	2.01	.42	2.43	.45
	45~60시간 미만	2.86	.75	2.00	.40	2.43	.44
	61시간 이상	2.78	.84	1.99	.48	2.37	.53
	F값	1.966		.108		1.558	
종사자 소득	100만원 미만	2.83	.84	2.01	.42	2.41	.50
	100~150만원 미만	2.88	.78	2.04	.41	2.45	.45
	150~200만원 미만	2.86	.76	2.01	.40	2.43	.45
	200만원 이상	2.79	.75	1.98	.41	2.37	.45
	F값	1.536		2.230		2.637*	
종사자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2.86	.83	2.05	.45	2.44	.49
	사무직	2.85	.71	1.98	.38	2.41	.42
	서비스,판매업	2.79	.80	2.01	.40	2.39	.47
	생산단순노무직	2.87	.78	2.03	.44	2.44	.47
	F값	1.047		2.581		1.248	
종사자 지위	비임금근로자	2.85	.79	2.01	.40	2.41	.48
	임시일용직	2.87	.79	2.02	.40	2.43	.46
	상용직	2.82	.76	2.00	.41	2.40	.45
	F값	1.004		.436		.811	

*p <0.05, **p <0.01, ***p <0.001

미혼자들의 결혼관을 살펴보면 개인특성에서 남성과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불교 일 때 결혼관이 평등하고 열린 가치를 갖고 있다. 가족특성에

서는 부모와 동거,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이 높을수록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이 없을수록 결혼에 대해 열린 가치와 선호가치를 갖고 있다. 만혼가치의 경우도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가치 등에 의해 만혼이 높아지고 있음에 찬성하고 있다. 일(근무)특성에서는 비취업자가 결혼관에 대해 열린 가치를 갖고 있으며, 다른 특성과는 차이가 없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남성과 학력이 대졸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불교인 경우가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혼의 경향에 대해서도 개인적이유(독신의 삶,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교육기간이 길어진 점, 결혼보다 일이 우선)와 가족이유(결혼비용의 부담, 가족생활의 부담, 결혼의 의무부담, 배우자기대수준) 경제적 이유(안정된 직장의 어려움, 수입의 불충분)에 대한 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결혼관에 있어 가족환경특성은 형제순위를 제외하고 상관관계가 있고, 일 특성은 취업여부 외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조건과 가족환경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결혼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미혼자들의 개인과 가족환경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관은 가족이나 학교, 연령이나 종교기관 등에서 결혼관은 오히려 가변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도 미혼자들의 일반적인 평점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의 경향이 있지만 만혼의 가치에 대한 찬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드시 결혼해야한다는 비율은 현격히 줄었지만, 결혼을 대체로 찬성한다는 유연적인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많은 조사연구는 일치한다고 하겠다. 다만 결혼관에 관련되는 변수들을 이해함으로써, 추후 결혼가치 선호성을 교육하고 홍보해야할 구체적인 대상을 선택하는 데 근거가 될 것이다.

3.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자녀가치관

〈표 4〉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자녀가치관

변인	자녀 필요성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 가치관		
	M	SD	M	SD	M	SD	
성별	남자	3.02	.69	2.75	.45	2.885	.46
	여자	2.97	.71	2.73	.45	2.850	.47
F값	4.376*		1.338		4.574*		

*p <0.05, **p <0.01, ***p <0.001

<표 4> 계속

변인	자녀 필요성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 가치관		
	M	SD	M	SD	M	SD	
연령	20~24	3.05	.69	2.78	.44	2.915	.46
	25~29	3.01	.67	2.72	.44	2.868	.43
	30~34	3.01	.70	2.70	.46	2.852	.47
	35~39	2.84	.77	2.65	.47	2.743	.52
	40~44	2.56	.74	2.60	.48	2.586	.51
	F값	15.735***		9.454***		18.393***	
학력	고졸이하	2.94	.74	2.74	.46	2.839	.49
	대졸이상	3.02	.68	2.74	.45	2.877	.46
	F값	6.77**		.000		3.813	
종교	불교	3.06	.68	2.73	.45	2.896	.46
	기독교(개신교·천주교)	3.00	.70	2.76	.46	2.876	.47
	무교	2.98	.70	2.73	.44	2.856	.46
	F값	2.924		.992		1.859	
현재 부모님과 의 동거여부	비동거	2.99	.71	2.76	.47	2.876	.48
	동거	3.00	.70	2.73	.44	2.867	.46
	F값	.116		2.215		.219	
부모님으로부터 의 경제적 수혜 여부	전혀 도움받지않음	3.00	.69	2.73	.44	2.861	.46
	50%미만 도움 받음	2.99	.66	2.73	.43	2.857	.44
	50%이상 도움 받음	3.10	.68	2.73	.47	2.915	.44
	전적으로 도움받음	2.99	.72	2.75	.45	2.872	.48
	F값	2.343		.995		1.257	
형제순위	첫째	3.01	.71	2.75	.45	2.875	.47
	둘째	3.00	.70	2.74	.44	2.870	.46
	셋째~일곱째	2.97	.69	2.66	.42	2.816	.45
	F값	.502		5.432**		2.708	
부모님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3.01	.692	2.74	.45	2.875	.46
	있다	2.90	.762	2.70	.46	2.801	.51
	F값	5.881*		1.399		5.723*	
형제의 이혼, 별거, 재혼 경험	없다	3.01	.64	2.75	.44	2.879	.43
	있다	2.73	.77	2.60	.46	2.667	.52
	F값	20.513***		11.922**		26.843***	
취업여부	비취업	3.01	.71	2.76	.44	2.885	.48
	취업	2.99	.69	2.72	.45	2.858	.46
	F값	.386		5.434*		2.559	

*p <0.05, **p <0.01, ***p <0.001

〈표 4〉 계속

변인	자녀 필요성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 가치관		
	M	SD	M	SD	M	SD	
종사자 근무시간	36시간 미만	2.90	.79	2.75	.42	2.825	.51
	36~44시간 미만	2.95	.68	2.71	.47	2.826	.46
	45~60시간 미만	3.02	.68	2.72	.45	2.868	.44
	61시간 이상	3.05	.64	2.70	.42	2.874	.44
	F값	2.094		.376		1.154	
종사자 소득	100만원 미만	2.95	.79	2.68	.45	2.814	.52
	100~150만원 미만	3.02	.65	2.66	.45	2.839	.43
	150~200만원 미만	3.02	.65	2.78	.47	2.899	.44
	200만원 이상	2.96	.72	2.74	.45	2.850	.46
	F값	1.060		6.915***		2.401	
종사자 직종	고위관리,(준)전문직	3.03	.78	2.69	.46	2.859	.49
	사무직	2.96	.64	2.73	.45	2.847	.44
	서비스,판매업	3.02	.67	2.76	.45	2.888	.44
	생산단순노무직	2.94	.73	2.62	.47	2.781	.49
	F값	1.526		5.70**		2.982*	
종사자 지위	비임금근로자	3.09	.65	2.80	.44	2.944	.40
	임시일용직	3.00	.73	2.70	.45	2.847	.49
	상용직	2.98	.68	2.72	.46	2.851	.45
	F값	1.626		2.483		2.812	

*p <0.05, **p <0.01, ***p <0.001

미혼자들은 개인특성인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대졸인 경우, 가족환경의 경우는 형제순위가 첫째, 부모 형제의 이혼 별거 재혼의 경험이 없을수록, 일 특성상 비취업, 소득수준이 중간 집단일수록 종사자 직종이 고위관리전문직, 서비스판매업직인 경우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으로 응답했고,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개방적이고 선택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자녀의 필요성은 일(근무환경)자체가 좀 더 자유롭거나 전문직일수록, 가족환경의 파장이 없을수록 장자녀 인경우가 긍정적 답변을 했고, 자녀의 필요성에도 연령이 어리고 대졸인 경우 남성의 경우가 필요성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자녀태도에서는 자녀의 인생가치, 부모와 자녀관계 의미 가치, 노후에 자녀의 정서적 지원가치, 노후 경제적 지원 가치, 가계계승의 가치, 사회에 대한 의무 자녀로 인한 부모의 자유, 무자녀의 선택 등에 대해서 비교적 개방적인 편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갈수록 자녀출산에 대한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4.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결혼지원정책영역

〈표 5〉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결혼지원정책영역

변인	결혼지원정책영역							X ²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결혼준비교 육프로그램 제공	주택마련 지원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	결혼비용 자 등 지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107(8.2)	104(8.0)	143(10.9)	597(45.7)	45(3.4)	311(23.8)	23.483***
	여	125(10.8)	54(4.7)	159(13.7)	477(41.2)	37(3.2)	307(26.5)	
연령	20-24	96(8.7)	60(5.4)	152(13.8)	472(42.8)	39(3.5)	283(25.7)	63.131***
	25-29	69(8.7)	40(5.1)	88(11.1)	371(46.8)	27(3.4)	197(24.9)	
	30-34	31(9.2)	30(8.9)	39(11.5)	146(43.2)	7(2.1)	85(25.1)	
	35-39	28(16.9)	13(7.8)	17(10.2)	65(39.2)	9(5.4)	34(20.5)	
	40-44	8(11.8)	15(22.1)	6(8.8)	20(29.4)	0(0.0)	19(27.9)	
교육정도	고졸이하	52(9.6)	46(8.5)	63(11.6)	229(42.3)	23(4.2)	129(23.8)	7.408
	대졸이상	180(9.4)	112(5.8)	239(12.4)	845(43.9)	59(3.1)	489(25.4)	
종교	불교	50(10.7)	32(6.8)	51(10.9)	202(43.2)	17(3.6)	116(24.8)	15.322
	기독교(개신교·천주교)	67(9.2)	45(6.2)	116(15.9)	302(41.4)	26(3.6)	173(23.7)	
	무교	11399.1)	80(6.4)	133(10.7)	560(44.9)	37(3.0)	323(25.9)	
부모님과 동거여부	비동거	39(8.2)	36(7.5)	28(5.9)	237(49.7)	20(4.2)	117(24.5)	28.302***
	동거	193(9.7)	122(6.1)	274(13.8)	837(42.1)	62(3.1)	501(25.2)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전혀도움 받지않음	89(9.6)	74(8.0)	102(11.0)	416(44.7)	33(3.5)	216(23.2)	22.035
	50%미만 도움받음	32(10.6)	12(4.0)	32(10.6)	124(41.2)	8(2.7)	93(30.9)	
	50%이상 도움받음	24(10.3)	9(3.8)	34(14.5)	108(46.2)	7(3.0)	52(22.2)	
	전적으로 도움받음	84(8.6)	62(6.4)	131(13.4)	416(42.6)	34(3.5)	249(25.5)	
출생 순위	첫째	125(9.5)	79(6.0)	155(11.8)	593(45.0)	48(3.6)	317(24.1)	17.070
	둘째	74(9.0)	48(5.8)	117(14.2)	349(42.3)	26(3.1)	212(25.7)	
	셋째~일곱째	32(11.0)	31(10.7)	27(9.3)	122(42.1)	8(2.8)	70(24.1)	
부모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예	18(10.1)	6(3.4)	28(15.7)	84(47.2)	6(3.4)	36(20.2)	7.152
	아니오	214(9.4)	152(6.7)	274(12.0)	986(43.2)	75(3.3)	581(25.5)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있음	17(19.5)	6(6.9)	10(11.5)	30(34.5)	2(2.3)	22(25.3)	11.883*
	없음	87(8.8)	84(8.5)	104(10.5)	443(44.9)	28(2.8)	240(24.3)	

*p <0.05, **p <0.01, ***p <0.001

〈표 5〉 계속

변인	결혼지원정책영역							X ²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결혼준비교 육프로그램 제공	주택마련 지원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	결혼비용 자 등 지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취업 경험 유무	취업 비취업	144(9.7) 88(9.0)	101(6.8) 57(5.8)	170(11.4) 132(13.5)	667(44.9) 407(41.5)	41(2.8) 41(4.2)	362(24.4) 256(26.1)	9.046
근로 시간	36시간미만	8(8.1)	9(9.1)	8(8.1)	46(46.5)	3(3.0)	25(25.3)	20.188
	36-44시간	35(8.9)	21(5.3)	61(15.4)	172(43.5)	9(2.3)	97(24.6)	
	45-60시간	79(11.4)	56(8.1)	67(9.7)	285(41.1)	20(2.9)	186(26.8)	
	61시간이상	5(8.8)	3(5.3)	6(10.5)	27(47.4)	4(7.0)	12(21.1)	
근로 소득	100만원미만	17(11.9)	6(4.2)	21(14.7)	60(42)	2(1.4)	37(25.9)	23.538
	100-150만원 미만	46(11.4)	23(5.7)	42(10.4)	176(43.7)	10(2.5)	106(26.3)	
	150-200만원 미만	26(6.7)	32(8.2)	46(11.9)	164(42.3)	15(3.9)	105(27.1)	
종사자 직종	200만원 이상	45(10.3)	36(8.2)	48(10.9)	214(48.7)	11(2.5)	85(19.4)	17.025
	고위관리자(준)전문직	30(12.1)	25(10.1)	29(11.7)	111(44.9)	4(1.6)	48(19.4)	
	사무직	52(9.0)	36(6.3)	73(12.7)	252(43.8)	18(3.1)	144(25.0)	
	서비스·판매업	42(9.0)	26(5.5)	48(10.2)	214(45.6)	17(3.6)	122(26.0)	
종사자 지위	생산단순노무직	19(11.9)	12(7.5)	18(11.3)	73(45.6)	2(1.3)	36(22.5)	19.128*
	비임금근로자	12(12.0)	13(13.0)	12(12.0)	47(47.0)	4(4.0)	12(12.0)	
	임시일용직	41(10.6)	19(4.9)	49(12.6)	175(45.1)	6(1.5)	98(25.3)	
	상용직	91(9.4)	69(7.2)	105(10.9)	428(44.4)	30(3.1)	242(25.1)	

*p <0.05, **p <0.01, ***p <0.001

미혼자들의 개인 특성에서 남성의 경우, 주택마련지원(45.7%), 결혼비용융자 지원(23.8%),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제공(10.9%)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주택마련지원(41.2%), 결혼비용 융자 지원(26.5%),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13.7%) 순으로 동일한 순위로 결혼지원정책영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24(42.8%), 25-29(46.8%), 30-34(43.2%), 35-39(39.2%), 40-44(29.2%)로 연령집단 모두 '주택마련지원'이 1순위로, 20-24(25.7%), 25-29(24.9%), 30-34(25.1%), 35-39(20.5%), 40-44(27.9%)로 연령집단 모두 '결혼비용융자 지원'이 2순위로 나타났으나 각 연령 집단별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20-24(13.8%), 25-29(11.1%), 30-34(11.5%)으로 세 연령 집단은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제공'이, 35-39(16.9%)는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0-44(22.1%)는 '이성간 만남의 장마련'으로 3순위에서는 각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교육정도나 종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환경특성별로 보았을 때,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 주택마련지원(49.7%), 결혼비용융자 지원(24.5%),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8.2%)의 순으로 나타났고, '동거'의 경우,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주택마련지원(42.1%), 결혼비용융자 지원(25.2%),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13.8%)의 순으로 나타나 1,2순위는 동일하나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3순위에서는 집단별로 결혼지원정책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형제·자매의 가족과경험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지원(34.5%), 결혼비용융자 지원(25.3%),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19.5%)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을 경우, 주택마련지원(44.9%), 결혼비용융자 지원(24.3%),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제공(10.5%)의 순으로 나타나 1,2순위는 동일하나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3순위에서는 집단별로 결혼지원정책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출생순위, 부모의 결혼생활 파경 등의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 환경특성별로 보았을 때, 종사자 지위에서 비임금 근로자는 '주택마련지원(47.0%)', '이성간 만남의 장마련(13.0)', '결혼비용융자 지원,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제공(각각 1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동일한 응답비율을 나타내었다. 임시일용직은 '주택마련지원(45.1%)', '결혼비용융자 지원(25.3%)',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제공(12.6%)'의 순으로 나타났고, 상용직의 경우 '주택마련지원(44.4%)'로 '결혼비용융자 지원(25.1%)',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제공(10.9%)'의 순으로 임시일용직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으나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취업경험 유무, 근로시간, 근로소득, 종사자 직종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개인, 가족환경, 일 환경특성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 5>를 보면 주택마련지원과 결혼비용융자 지원 등은 각 특성에 관계없이 결혼지원정책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5.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영역

<표 6>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사회적지원 영역

변인	자녀양육지원정책영역(사회적지원)								X ²
	양육교육 비지원	주거지원	난임출산 지원	방과 후 돌봄	세금감면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772(44.9)	327(19.0)	36(2.1)	66(3.8)	44(2.6)	61(3.5)	413(24.0)	28.772 ***
	여	690(44.5)	208(13.4)	38(2.5)	69(4.5)	50(3.2)	41(2.6)	454(29.3)	
연령	20-24	664(46.6)	199(14.0)	29(2.0)	68(4.8)	44(3.1)	40(2.8)	382(26.8)	34.509
	25-29	452(42.0)	187(17.4)	28(2.6)	45(4.2)	30(2.8)	43(4.0)	290(27.0)	
	30-34	209(47.2)	86(19.4)	7(1.6)	12(2.7)	8(1.8)	12(2.7)	109(24.6)	
	35-39	97(44.5)	38(17.4)	6(2.8)	5(2.3)	8(3.7)	3(1.4)	61(28.0)	
	40-44	40(37.4)	25(23.4)	4(3.7)	5(4.7)	4(3.7)	4(3.7)	25(23.4)	

*p <0.05, **p <0.01, ***p <0.001

〈표 6〉 계속

변인	자녀양육지원 정책영역(사회적지원)								X ²
	양육교육 비지원	주거지원	난임출산 지원	방과 후 돌봄	세금감면	보험료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교육정도	고졸이하	349(48.1)	129(17.80)	17(2.3)	25(3.4)	23(3.2)	25(3.4)	157(21.7)	13.590*
	대졸이상	1113(43.8)	406(16.0)	57(2.2)	110(4.3)	71(2.8)	77(3.0)	710(27.9)	
종교	불교	278(44.3)	111(17.7)	13(2.1)	22(3.5)	24(3.8)	20(3.2)	159(25.4)	18.512
	기독교(개신교·천주교)	425(44.3)	135(14.1)	28(2.9)	43(4.5)	25(2.6)	21(2.2)	282(29.4)	
	무교	749(45.3)	281(17.00)	33(2.0)	70(4.2)	45(2.7)	60(3.6)	416(25.2)	
부모님과 동거여부	비동거	265(42.3)	114(18.2)	19(3.0)	21(3.3)	21(3.3)	19(3.0)	168(26.8)	6.417
	동거	1197(45.3)	421(15.9)	55(2.1)	114(4.3)	73(2.8)	83(3.1)	699(26.5)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전혀 도움받지 않음	538(44.0)	229(18.7)	27(2.2)	38(3.1)	43(3.5)	41(3.4)	307(25.1)	21.013
	50%미만도움받음	175(44.3)	64(16.2)	11(2.8)	16(4.1)	13(3.3)	14(3.5)	102(25.8)	
	50%이상도움받음	141(45.8)	48(15.6)	6(1.9)	15(4.9)	9(2.9)	10(3.2)	79(25.6)	
출생 순위	전적으로도움받음	596(45.5)	191(14.6)	27(2.1)	65(5.0)	29(2.2)	35(2.7)	366(28.0)	13.354
	첫째	760(43.9)	282(16.3)	34(2.0)	66(3.8)	59(3.4)	55(3.2)	474(27.4)	
	둘째	485(44.3)	173(15.8)	28(2.6)	55(5.0)	26(2.4)	36(3.3)	293(26.7)	
부모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셋째~일곱째	183(46.1)	80(20.2)	8(2.0)	14(3.5)	9(2.3)	11(2.8)	92(23.2)	5.959
	예	114(47.7)	34(14.2)	4(1.7)	4(1.7)	7(2.9)	9(3.8)	67(28.0)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아니오	1344(44.4)	499(16.5)	70(2.3)	131(4.3)	87(2.9)	93(3.1)	800(26.5)	5.678
	있음	54(44.6)	22(18.2)	3(2.5)	2(1.7)	1(0.8)	4(3.3)	35(28.9)	
취업 경험 유무	없음	614(45.3)	189(13.9)	41(3.0)	60(4.4)	42(3.1)	41(3.0)	368(27.2)	8.385
	취업	864(43.7)	344(17.4)	44(2.2)	80(4.0)	63(3.2)	68(3.4)	514(26)	
근로 시간	비취업	598(46.3)	191(14.8)	30(2.3)	55(4.3)	31(2.4)	34(2.6)	353(27.3)	27.043
	36시간미만	77(53.1)	22(15.2)	2(1.4)	6(4.1)	2(1.4)	1(0.7)	35(24.1)	
	36-44시간	233(43.9)	89(16.8)	11(2.1)	17(3.2)	17(3.2)	18(3.4)	146(27.5)	
	45-60시간	371(41)	156(17.3)	22(2.4)	43(4.8)	32(3.5)	35(3.9)	245(27.1)	
근로 소득	61시간이상	26(36.1)	21(29.2)	0(0)	1(1.4)	0(0)	1(1.4)	23(31.9)	19.006
	100만원미만	87(46.5)	24(12.8)	4(2.1)	8(4.3)	9(4.8)	8(4.3)	47(25.1)	
	100-150만원 미만	244(47.2)	94(18.2)	11(2.1)	18(3.5)	14(2.7)	15(2.9)	121(23.4)	
	150-200만원 미만	206(39.8)	86(16.6)	15(2.9)	29(5.6)	18(3.5)	20(3.9)	143(27.7)	
종사자 직종	200만원 이상	247(40.8)	113(18.7)	14(2.3)	21(3.5)	17(2.8)	20(3.3)	173(28.6)	22.042
	고위관리자(준)전문직	146(42)	68(19.5)	7(2.0)	15(4.3)	10(2.9)	14(4.0)	88(25.3)	
	사무직	318(41.4)	125(16.3)	23(3.0)	31(4.0)	20(2.6)	27(3.5)	224(29.2)	
	서비스·판매업	268(43.9)	111(18.2)	13(2.1)	27(4.4)	26(4.3)	23(3.8)	143(23.4)	
종사자 지위	생산단순노무직	106(52.2)	33(16.3)	1(0.5)	6(3.0)	6(3.0)	4(2.0)	47(23.2)	7.909
	비임금근로자	63(44.7)	29(20.6)	3(2.1)	4(2.8)	6(4.3)	2(1.4)	34(24.1)	
	임시일용직	221(45.7)	75(15.5)	9(1.9)	18(3.7)	18(3.7)	15(3.1)	128(26.4)	
	상용직	561(42.8)	232(17.7)	31(2.4)	58(4.4)	38(2.9)	50(3.8)	342(26.1)	

*p <0.05, **p <0.01, ***p <0.001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사회적 지원 영역에 대한 것은 <표 6>과 같다. 미혼자들은 개인특성 중 성별에서 남성이 자녀양육지원 중 사회적 지원으로써 양육교육비지원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지원이 24%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 방과 후 돌봄, 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난임출산지원 순이었다. 다음으로 여성은 양육교육비지원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지원이 29.3%로 다음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 방과 후 돌봄, 세금감면, 보험료 지원, 난임출산지원 순이었다. 요구하는 영역의 순위는 조금씩 달랐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양육교육비 지원 요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졌다 그리고 교육정도에서 고졸이하의 양육교육비 지원을 48.1%로 가장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일·가정 양립지원이 21.7%로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 방과 후 돌봄, 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난임출산지원의 순으로 보였다. 이와 비슷하게 대졸이상에서 역시 양육교육비 지원을 43.8%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일·가정 양립지원이 27.9%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지원, 방과 후 돌봄, 보험료 지원, 세금감면, 난임출산지원으로 고졸이상과 비슷한 순위를 보였다. 그러나 가족환경 특성이나 일 특성에서는 자녀양육지원영역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특성인 성별과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자녀양육지원 정책 사회적지원영역에 대해 각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사회적 지원 영역으로 전체를 보았을 때는 1순위가 양육교육비 지원과 2순위가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가치를 두고 있어 모든 특성에 있어 공통된 사회적 지원 요구영역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사회적여건 영역

변인	자녀양육지원정책영역(사회적여건)			X ²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저렴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출산 양육의 안정적인 환경조성		
	빈도(%)	빈도(%)	빈도(%)		
성별	남	440(25.5)	727(42.1)	558(32.3)	4.102
	여	400(25.8)	697(45.0)	453(29.2)	
연령	20-24	371(26.0)	620(43.4)	437(30.6)	15.874*
	25-29	256(23.7)	486(45.1)	336(31.2)	
	30-34	119(26.8)	191(43.0)	134(30.2)	
	35-39	59(27.2)	98(45.2)	60(27.6)	
	40-44	35(32.4)	29(26.9)	44(40.7)	
교육정도	고졸이하	197(27.1)	306(42.0)	225(30.9)	1.179
	대졸이상	643(25.2)	1118(43.9)	786(30.9)	

<표 7> 계속

변인		자녀양육지원정책영역(사회적여건)			X ²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저렴 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빈도(%)	빈도(%)	빈도(%)	
종교	불교	173(27.6)	268(42.7)	186(29.7)	4.716
	기독교(개신교·천주교)	232(24.2)	442(46.0)	286(29.8)	
	무교	427(25.7)	705(42.5)	527(31.8)	
부모님과 동거여부	비동거	150(23.9)	302(48.2)	175(27.9)	7.015*
	동거	690(26.1)	1122(42.4)	836(31.6)	
부모님으로 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전혀 도움받지 않음	318(25.9)	547(44.6)	361(29.4)	2.884
	50%미만 도움받음	101(25.6)	165(41.8)	129(32.7)	
	50%이상 도움받음	82(26.6)	135(43.8)	91(29.5)	
	전적으로 도움받음	333(25.4)	560(42.7)	419(31.9)	
출생 순위	첫째	456(26.3)	741(42.7)	538(31.0)	2.139
	둘째	285(26.0)	479(43.6)	334(30.4)	
	셋째~일곱째	92(23.2)	173(43.6)	132(33.2)	
부모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예	81(33.9)	84(35.1)	74(31.0)	10.850*
	아니오	759(25.0)	1337(44.1)	934(30.8)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있음	42(34.7)	53(43.8)	26(21.5)	5.435
	없음	350(25.8)	617(45.5)	389(28.7)	
취업 경험 유무	취업	523(26.4)	858(43.4)	598(30.2)	1.891
	비취업	317(24.5)	566(43.7)	413(31.9)	
근로 시간	36시간미만	30(20.7)	65(44.8)	50(34.5)	14.030*
	36-44시간	158(29.6)	224(42.0)	151(28.3)	
	45-60시간	243(26.8)	389(42.9)	274(30.2)	
	61시간이상	11(15.3)	43(59.7)	18(25.0)	
근로 소득	100만원미만	51(27.4)	64(34.4)	71(38.2)	12.891*
	100-150만원 미만	121(23.4)	225(43.5)	171(33.1)	
	150-200만원 미만	141(27.1)	224(43.1)	155(29.8)	
	200만원 이상	174(28.8)	264(43.7)	166(27.5)	
종사자 직종	고위관리자·(준)전문직	96(27.6)	142(40.8)	110(31.6)	4.616
	사무직	203(26.4)	349(45.4)	216(28.1)	
	서비스·판매업	162(26.5)	257(42.1)	192(31.4)	
	생산단순노무직	48(23.4)	89(43.4)	68(33.2)	

*p <0.05, **p <0.01, ***p <0.001

<표 7> 계속

변인	자녀양육지원정책영역(사회적여건)			X ²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저렴·균등한 보육 기회 제공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빈도(%)	빈도(%)	빈도(%)	
비임금근로자	44(31.2)	58(41.1)	39(27.7)	9.254
종사자 지위 임시일용직	120(24.7)	194(40.0)	171(35.3)	
상용직	349(26.6)	588(44.8)	376(28.6)	

*p <0.05, **p <0.01, ***p <0.001

자녀양육지원 사회적여건 영역에 대한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의 차이는 <표7>과 같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연령의 경우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는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순으로 높으나, 40~44세는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이 40.7%,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이 32.4%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성별, 교육정도, 종교에 따라서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에서는 부모님과 동거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동거 하는 대상자가 비동거하는 대상자에 비해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과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이 높으며, 비동거 하는 대상자는 동거하는 대상자에 비해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이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동거하는 대상자의 경우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48.2%,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27.9%,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23.9%로 나타났으며, 비동거하는 대상자 또한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42.4%,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31.6%,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26.1%로 나타나 부모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부모님의 이혼, 별거 및 재혼 경험여부에 상관없이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경험이 있는 대상자보다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원하는 응답자가 높아 차이를 보였고, 부모님의 이혼, 별거 및 재혼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35.1%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33.9%,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31.0% 순이었으나, 부모님의 이혼, 별거 및 재혼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44.1%,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30.8%,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형성 33.9%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외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출생순위,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특성에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61시간 이상인 대상자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이 높고,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 형성이 낮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 모든 집단이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 형성 순으로 응답했으나, 36~44시간 집단은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42.0%,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 형성 29.6%,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28.3%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근로소득에서 100만원 미만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이 가장 높았으나, 100만원 미만 응답자는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00~150만원 미만 집단과 150~2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 형성 순이었지만, 100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38.2%,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34.4%,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 형성 27.4%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상 집단의 경우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43.7%, 자녀·출산 양육에 대한 가치문화 형성 28.8%,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 27.5%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취업경험 유무, 종사자 직종, 종사자 지위에 따라서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사회적 여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정리해보면, 40~44세 연령으로 결혼 적령기에서 멀어졌을수록, 부모님과 동거를 할수록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을 원했으며, 근로 시간이 61시간 이상 이거나 근로 소득이 200만원 이상 일수록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을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특성,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상관 없이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사회여건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결혼지원정책요구도와 자녀양육지원정책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결혼지원정책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결혼지원정책 요구도에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다만 결혼지원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정도와 자녀가치관이었다. 즉 결혼지원정책의 요구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의존도가 낮을수록 자녀가치관이 개방적이고 독립적이

며, 선택적 가치를 가질수록 국가에 대한 결혼지원정책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결혼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개인의 자녀가치의식과 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에 대한 설명력은 7.9%정도로서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지원정책 요구도에 대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변인들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 8〉 결혼지원정책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결혼정책요구도	
	B	β
성별	-.042	-.026
연령	-.045	-.062
교육정도	.022	.013
종교	-.038	-.037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072	-.43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096	-.108
출생 순위	.010	.009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270	-.081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129	-.44
근로 시간	-.026	-.024
근로 소득	.011	.013
종사자 직종	-.017	-.19
종사자 지위	-.075	-.59
가족관	.104	.038
결혼가치관	-.110	-.064
자녀가치관	-.452	-.248
상수		4.543
R ²		.098
(F)		5.20***

*p <0.05, **p <0.01, ***p <0.001

2) 자녀양육지원정책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양육지원정책요구도와 관련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 가족 특성, 일의 특성,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의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회귀모형은 의미가 있었으며, 여러 변수 중 자녀가치관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치관이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선택적 가치가 있을수록 양육지원정책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가치관의 변인으로 설명되는

정도는 4.5%이다.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자녀가치관이 강해질수록 다른 외재적 변수보다 자녀양육지원정책요구를 강하게 될 것이다.

〈표 9〉 자녀양육지원정책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자녀양육지원정책요구도	
	B	β
성별	.029	.025
연령	-.032	-.062
교육정도	-.054	-.044
종교	-.033	-.046
현재 부모님과 동거여부	.041	.035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수혜여부	-.042	-.068
출생 순위	.030	.041
부모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040	-.017
형제·자매의 이혼 및 별거, 재혼 경험여부	-.077	-.037
근로 시간	-.021	-.027
근로 소득	-.032	-.054
종사자 직종	.020	.032
종사자 지위	.022	.025
가족관	.034	.017
결혼가치관	.011	.009
자녀가치관	.260	.200
상수		3.730
R ²		.064
(F)		3.276***

*p <0.05, **p <0.01, ***p <0.001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2009년 전국 가족 및 출산동향조사>의 원 자료 중 만20-44세의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미혼자의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근무)환경에 따라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이 어떻게 차이를 나는지를 알아보고, 결혼지원정책요구도와 자녀양육지원정책 요구도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래 정책 개발의 방향성과영역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의 한계를 갖고 분석된 자료이기는 하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혼(결혼가치관)과 가족가치관 자녀가치관 등의 가치관이

장기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과 관련한 논문들은 대체로 표본의 부절적성이나 일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국단위의 대표성을 가진 가치를 재정리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논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여성과 대졸이상, 가족환경특성으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집단 가족과정 경험에 없는 집단, 직종이 고위(관리) 전문직사무직, 근로시간이 짧은 집단, 종사자 지위가 상용직임시일용직인 경우에는 성역할분리의식이나 남편보다 아내의 돌봄노동, 취업 중에서도 자녀관계 유지, 생계의 공유의식, 아버지의 육아참여, 등의 부부역할에 평등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의 개인성, 부부갈등시의 이혼가능성, 입양의 수용, 이혼과 재혼의 수용, 동거의 수용, 혼전의 수용 등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가치관에 있어 집단간의 평균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4점 만점에서 2.9-3.0점대의 찬성가치를 표출하고 있어, 미혼자들의 경우는 가족가치관이 비교적 평등가치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가족가치관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여성부, 2003, 보건사회연구원 2000, 2005) 따라서 미혼자들의 가족가치관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평등성 개방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집단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이나 활동자료의 기초 근거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둘째, 미혼자들의 결혼관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결혼(만혼)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대졸집단인 경우 불교집단 가족환경특성이 부모와 동거, 부모나 형제자매의 가족과정이 없는 집단, 취업한 집단인 경우가 결혼의 필요성에 높게 응답했는데, 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신효영 방은령, 2008, 최미정, 2010, 김혜환, 2010, 김혜곤, 2005, 오원옥, 2009 등)

특히 이번 원고에서 만혼에 대한 결혼관분석에서 개인적인 이유(독신의 삶, 결혼의 회의, 교육기간이 길어진 점, 결혼보다 일이 우선)와 가족적 이유(결혼비용의 부담, 가족생활의 부담, 결혼의무의 부담, 배우자기대수준) 경제적 이유(안정된 직장의 어려움, 수입의 불충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 결혼관은 개인이나 가족환경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취업유무 외에 일 특성과는 상관없는 것을 보면, 결혼가치관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의해 변화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와 같이 '만드시 결혼해야한다'는 비율은 많이 줄었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9) 평점 2.9-3.10 정도로 대체로 찬성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음으로써, 결혼선호가치성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과 만혼의 사유로 지적되는 개인적 이유, 가족적 이유, 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만혼 가치관을 해결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미혼자들의 자녀가치관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남성,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관

경특성증 형제가 장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가족과정의 경험이 없을수록 일(근무)환경이 좀 더 자유롭거나 전문직일수록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녀가치에서 자녀가 인생에 갖는 의미, 노후의 자녀가 갖는 정서적 가치, 노후의 경제적 지원 가치, 가계계승의 가치, 사회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유, 무자녀의 선택 등에서 비교적 개방적이고 선택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대체로 찬성의 가치(평균2.8-3.0)를 갖고 있어 자녀출산에 대한 절대적 가치는 사라지고 상대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녀를 갖는 의미나 가치에 대한 기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자녀를 키우는 행복, 양육의 즐거움 등의 개인적인 자녀선호가치를 흥복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결혼지원정책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면 1순위는 개인, 가족환경특성, 일(근무)특성집단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결혼지원정책영역에서 <주택마련지원>이 1순위. <결혼비용마련지원> 2순위,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제공>3순위, <이성간의 만남의 장 마련>이 4순위.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등>5순위.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가 6순위로 나타났다. 물론 남성과 연령의 범위에 따라 부모님과 동거여부 형제자매의 가족과정종사자지위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순위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나이가 많을수록 <이성만남의 장 마련>이 높게 나타나긴 한다. 따라서 결혼지원정책의 우선순위는 신혼부부가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인 포근한 집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신혼부부주택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효과가 없다. 적어도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을 가지고, 콘도처럼 가방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자들이 요구하는 결혼지원 영역은 아주 현실적이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준비교육이나 이성간의 만남의 장 마련, 결혼정보제공이나 상담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정부가 신혼부부주택정책과 돈이 들지 않는 결혼식문화 조성, 결혼비용의 저리 융자 등의 금융정책 등을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면 될 것이다. 특히 만혼의 여파는 다시 국제결혼여성의 유입을 갖고 오게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혼의 이유를 역으로 분석하여 결혼지원정책을 다각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혼지원사업법 등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협조, 신혼부부주택사업의 촉진, 결혼지원기금 등의 조성, 금융기관의 협조 결혼 문화의 건전성 확보, 웨딩플래너나 결혼정보회사 등의 사업적 근거와 지원, 다양한 결혼유형의 지원(미혼부모의 결혼유지 등), 결혼상담과 교육 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녀양육지원정책과 관련 하여 사회적 지원과 여건의 영역에서는 개인 특성인 성별과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자녀양육지원정책 사회적 지원 영역에 대해 각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개인, 가족환경, 일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지원 사회적 지원 영역으로 전체를 보았을 때는 1순위가 양육교육비지원과 2순위가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가치를 두고 있어 모든 특성에 있어 공통된 사회적 지원 요구영역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여건의 영역에서는 40~44세 연령으로 결혼 적령기에서 멀어졌을수록, 부모님과 동거를 할수록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을 원했으며 근로시간이 61시간 이상 이거나 근로 소득이 200만원이상 일수록 출산 양육의 안정적 환경조성을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인특성, 가족환경특성, 일 특성에 상관없이 저렴,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사회적여건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영역은 자녀양육비지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저렴·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출산양육환경조성 양육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전방위적으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2010)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등의 외국의 자녀양육지원제도처럼 보편적인 가족정책이나 사회정책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한계와 법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들의 인식과 요구 영역에 부합되는 보편적인 자녀양육지원의 사회적 여건과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법의 제정(자녀양육지원사업법)과 보편적인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결혼지원정책요구와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혼지원에 대해 상대적 영향력을 가진 변인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수혜를 받는 정도와 자녀가치관이었다. 즉 결혼지원정책의 요구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의존도가 낮을수록 자녀가치관이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선택적 가치를 가질수록 국가에 대한 결혼지원정책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자녀가치관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치관이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선택적 가치가 있을수록 양육지원정책의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결혼과 자녀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는 미혼자들의 자녀가치관 변인이 의미 있게 영향을 주고 있는 점에서 <자녀가치관>이 개방적이고 선택적일 수록 정책의 요구도는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비록 이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자녀가치관의 긍정성과 선호성을 위한 노력은 전통주의적 자녀의미를 벗어나 자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부모됨에 가치를 갖는 홍보와 가치관 교육이 앞으로 요청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미리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관계로 변수의 선택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어서 내재적인 변수나 사회심리적 과정 변수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단위의 가족관, 결혼관, 자녀가치관 등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결혼, 자녀양육지원정책의 필요성과 그에 관련된 정책의 영역과 순위 등을 정리해 봄으로써 정책의 영역의 다각화와 미래의 정책개발 방향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자들의 가족가치관, 결혼(만혼)관, 자녀가치관 등을 고려했을 때, <자녀가치관>은 결혼지원-자녀양육지원정책요구의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자녀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요청된다 이는 공교육과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열린 가치인식교육이 요청된다.

둘째, 결혼관의 경우는 개인과 가족환경 특성 변수가 의미 있게 관련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지되듯이, 어릴 때부터 결혼의 긍정성 좋은 모델을 제공하여 결혼관 가치교육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생애주기 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대학교에 이르기 까지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기술과 전략 등을 제공하는 학교와 사회, 가정교육이 요청된다.

셋째, 아직까지 한국의 결혼지원정책은 미시적인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인구의 재생산과 가족의 형성이 적절한 연령의 결혼과 현실적 결혼형성이 기반이다. 이를 위해 만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진입이 쉬운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지원사업법 등의 제정을 통해 미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혼부부주택 건립, 웨딩문화의 유연화, 적절한 연령의 결혼지원, 결혼준비교육, 결혼상담과 교육, 결혼정보의 제공과 파트너의 공급, 국제결혼신부의 유입과 보호, 다양한 결혼형태의 수용하고 지원하는 전략의 합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 자녀양육지원의 사회적 여건과 사회환경의 조성은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미혼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녀양육비의 지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 저렴하고 균등한 교육비의 지원 등이다. 이는 모든 조건의 미혼자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가족 또는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보와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서 가족정책(자녀양육지원포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정책을 이해서는 조세제도나 교육제도 개선 예산확보를 위한 새로운 세제부담도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가족세(저출산세)의 새로운 세금(요양보호를 위한 세제 개발처럼)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원고를 작성하면서, 한계점은 조사 설문지 추가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다는 점과 사회심리적 과정 변수들이 더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환경의 사회심리적 변수나 가치 변수들이 더 포함된다면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 교육을 위한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형례(2009). 가임 연령 미혼남녀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세권(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분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두섭 외(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3).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2003). 저출산의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6호, pp.6-21.
- 김인춘, 최정원(2008).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 김한곤(2005).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원 외(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4」,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정(2010). 미혼남녀별 결혼 및 자녀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정부(2008).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2006-2010.
- 민희철 외(2007). 「연구보고서 07-06」,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한국조사연구원.
- 박성암(2009). 결혼예정자와 기혼자의 출산 의도와 출산 장려정책 및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교문사.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신윤정 외(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5」,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효영, 방은령(2008).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3호, pp. 95-113.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외(2008). 「연구보고서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영희 외(2008). 연구보고서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숙 외(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 93-108.
- 이연주, 김재일(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권 제1호, pp.61-90.
- 이삼식(2006). 저출산시대 인구정책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1호, pp. 5-17.
- 이삼식 외(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1」,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 총괄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출산·양육 분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8). 「연구보고서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10). 2010년도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9호, pp. 66-73.
- 이숙정, 오재림(2010).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1호, pp. 7-40.
- 오원옥 (2009). 대학생의 결혼의식, 원가족 건강성 및 성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2호, pp. 232-240.
- 오정균(2007).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과 학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 유계숙·유영주(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5호. pp. 79-94.
- 유계숙 외(2007). 성별과 세대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6호.
- 윤미라(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사회학적 변

- 인과 심리적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홍식(2010). 저출산과 정책과제에 대한 검토 월간 복지동향 통권 제137호, pp. 4-6.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출산 및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
한가정학회지 제43권 11호 통권 213호, pp. 165-183.
- 장혜경 외(20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3」, 「저출산 및 인구고
령화 대응 연구 -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혜선(2006).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정책 요구분
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덕 (2010).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6
권 제1호, pp. 1-31.
- 조에스더(2007).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에 따른 정부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인
식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은수(2007).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정(2007). 외국정책을 통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기초연구 -스웨덴, 프
랑스, 일본을 중심으로-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민(2009). 대학생의 결혼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2007).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 인식에 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홍표자(2010). 청소년 가치관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 전국 결혼, 출산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2009 전국 결혼, 출산동향조사」.

출산을 제고를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연구

최성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연구

최성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 서론

- 200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선진국 합계출산율의 평균인 1.75명의 68%에 불과한 수준임.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 변화추이는 선진국들 중 가장 빠른 둔화세를 보인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며, 2010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경기도의 2008년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높으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또한 20대 모의 출생아 수가 전국 및 경기도에서 비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30대 모의 출생아수는 증가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유발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잠재성장률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결혼기피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 높은 결혼비용, 소득 및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만혼과 결혼기피, 보육비용 증가 및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들 수 있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됨.
- 경기도에서는 매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위기의식 부족으로 종합적인 정책계획이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음.
-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나가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앞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출산장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저출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저출산 제도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경기도 결혼 및 출산 동향 자료를 분석하여 경기도 차원의 출산율 제고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정책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내 저출산 대응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경기도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제2장 저출산의 실태 및 정책현황

1. 저출산 실태

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

- 200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저출산국가에 속함.
-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에 달함.

나. 경기도의 저출산 실태

- 2008년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에 비하면 약간 높지만, 타 시, 도에 비하면 10위로 낮은 수준임.

2. 저출산의 원인

가. 사회적 요인

- 90년대 이후 결혼연령의 상승이 저출산을 주도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
 -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을 지연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임.
 - 남성과 달리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제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낌.

- 그러나 신세대 남성들에게서도 전통적인 성역할분담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함.
- 자녀관의 변화로 기대자녀수가 감소함.
 - 전일제 취업 여성의 경우, 기대자녀수는 더 낮음.

나. 경제적 요인

- 청년층의 불안한 경제적 여건은 결혼의 연기로 이어지고 이는 출산율 저하를 초래함.
- 자녀 양육과 교육에 지출되는 과도한 부담은 저출산의 요인이 됨.

다. 일·가정 양립의 딜레마

- 유자녀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가 없으면 취업단절의 요인이 됨.
- 우리 나라 남편의 가사분담율이 매우 낮아 취업여성의 양육 부담이 가중됨.

3.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

가.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 정부는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저출산 대책 주요 추진과제를 세움.
 -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나. 경기도의 저출산 대응정책

-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 대표 사례
 - 꿈나무 안심학교
 - 경기 아이 플러스 카드

- 가정보육교사

4.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가. 프랑스

- 가족형성을 지원하고 가족의 복지와 안전망을 확보하는 가족지원정책을 추진
 - 부모의 선택권 보장, 양육비 부담 더는 수당제도 시행.
 - 보육시설은 대부분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교육임.
 - 혼인유무와 무관하게 출산장려금 지급.
 - 임신 6개월 이후 의료비 전액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
 - 3세 될 때까지 매달 '신생아 환영수당' 지급 .
 - 양육을 위해 퇴직한 여성에게 3년간 매월 340 유로 지급.
 - 20세 이하 장애자녀 부양시 특수교육 수당 지급.

나. 스웨덴

- 스웨덴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복지를 책임지는 것을 가족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아동의 복지는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가 책임을 담당함.
- 스웨덴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으면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 남성의 가사분담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스웨덴사회는 남녀평등의 원칙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잘 구현되어 있음.
 -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보육 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가 강화되어 있음.
 - 육아휴직 중 두 달은 아버지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전업주부도 육아휴가 480일 동안 휴가 급여를 적용받음.
 -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기본 아동수당 월 85유로가 어머니에게 지급됨.

다. 미국

- 정부차원의 자녀양육 지원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은 미흡함.
- 노동시장구조가 유연하고, 민간 중심 보육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 정부보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경영을 시행하고 있음.
 - 기업은 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복지정책은 저소득층 편부모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 중심임.

라. 일본

-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진 이후 저출산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련법의 입법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가 성공적이지 않음.
- 정책의 수준이 미약하고, 노동시장이 성차별적이며, 남성의 가사분담이 저조한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 여성의 초혼연령의 증가, 보육시설의 부족, 높은 주택가격, 과중한 교육비 부담 등도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저출산 정책은 보육서비스의 확대(1995~1999년)에서 모자보건, 교육, 주택지원(2000~2004년) 등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성평등을 주목표로 두고,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춤.

제3장 경기도 결혼 및 출산 동향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대상 미혼남녀의 일반적 특성

- 조사 응답자의 성별은 미혼여성(49.4%)과 미혼남성(50.6%)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연령분포는 전반적으로 미혼남녀 모두 2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미혼남녀별 교육수준은 미혼남성에 비해 미혼여성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러나 경제활동상태는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 응답자의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나.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 응답 기혼여성의 연령분포는 30대(61.8%)가 절반이상을 차지해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4세(29.6%)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교육수준은 응답자 대부분이 고졸(54.2%) 및 대졸(41.5%)의 학력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현재 경제활동상태는 취업(38.2%)에 비해 비취업(61.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2. 경기도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가.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반드시 해야+하는편)가 68.9%로 전국(66.6%) 조사결과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 미혼남녀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미혼여성(65.7%)보다 미혼남성(72.1%)이 더 높았고, 결혼에 대한 유보적 태도(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도 미혼여성(30.5%)이 미혼남성(23.7%)보다 더 높았음. 이는 그동안 가부장적인 결혼제도가 미혼여성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결혼에 대한 태도는 남녀모두 공통적으로 고연령층이 될수록 부정적이지만

35~44세 미혼여성의 경우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게 낫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2%로 같은 연령대 미혼남성(6.2%)에 비해 두 배이상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이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과 그에 따르는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미혼남성보다는 미혼여성에게 더 크기 때문으로 보임.

□ 만혼 및 비혼 이유에 대한 태도

-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 20~44세 미혼남녀의 찬성태도(전적으로+대체로 찬성)는 고용불안정(92.3%) 및 낮은 소득(91.0%)을 주된 이유로 응답함.
- 또한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다소 낮지만 가치관의 변화도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라고 응답한 미혼여성(83.3%)이 미혼남성(78.0%)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부담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고, 여성 경제력의 향상으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해지는 추세가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성역할 구분('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과 돌봄기능('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잘할 수 있다')에 대해 미혼남성이 미혼여성보다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남성이 남편일과 아내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더 높았음.
- 반면, 미혼여성은 남편의 육아참여('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와 생계책임('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모두 높은 찬성정도를 나타내, 탈전통적 부부역할(남편의 육아참여)과 전통적 부부역할(남편의 생계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하지 않은 이유(1순위)

- 경기도 미혼남녀가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실업 및 고용불안정'과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전국보다 높았음.
- 미혼남녀 모두 자기개발 및 자아성취 욕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응답에서는 남녀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남. 미혼여성은 '결혼(혼수)비용'이, 미혼남성은 '실업 및 고용불안정'과 '낮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실업·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이 미혼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결혼장애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혼남녀의 연령별로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30~40대 미혼여성에 비해 미혼남성은 소득 및 실업·고용불안정 등의 경제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취업여부별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도 취업시 미혼여성은 '자아성취·자기개발'(15.6%)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혼남성은 '소득이 적어서'(16.4%)라고 응답해, 미혼여성에 비해 소득 및 고용불안 등의 경제적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결혼연기 경험 및 이유
-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경험은 미혼남성(8.5%)이 미혼여성(5.7%)보다 높았음.
 - 결혼을 연기한 이유는 미혼남녀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남. 미혼여성은 집안반대(47.4%)와 상대방의 수입(15.8%)이, 미혼남성은 집장만 및 결혼비용(23.5%)이 결혼을 연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나. 미혼남녀의 출산에 관한 태도

□ 자녀필요성

- 자녀필요성에 대해 전체 미혼남녀의 85.6%가 긍정적인 태도(반드시+갖는 것이 좋음)를 나타냄.
- 성별에 따라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반드시+갖는 것이 좋음)는 다소 차이가 있음. 미혼남성(86.6%)이 미혼여성(84.6%)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자녀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고연령층일수록 미혼남녀 모두 현저하게 낮아짐.
- 특히, 35~44세 미혼여성(52.9%)이 미혼남성(73.8%)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이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됨.
- 또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의견도 미혼여성(13.1%)이 미혼남성(1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자녀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대자녀수

- 경기도 미혼남녀의 기대자녀수 평균은 1.84명으로 전국 평균 1.86명보다 다소 작

음. 무자녀(1.5%) 및 1자녀(25.9%) 선호 경향도 전국에 비해 다소 높았음.

- 성별에 따라 미혼여성의 기대자녀수 평균은 1.81명, 미혼남성은 1.86명으로 나타남. 즉, 미혼여성은 1자녀이하(무자녀포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혼남성은 2자녀 이상 비율이 높았음. 이는 미혼여성의 1자녀관이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별 기대자녀수는 미혼여성이 고연령층일수록 2자녀와 3자녀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는 반면, 1자녀 및 무자녀의 비율은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고연령층일수록 가임기간 단축, 자녀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상대적으로 덜 출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짐작됨.

□ 소자녀 희망 이유

- 전체 응답자의 42.4%가 1자녀만을 출산하려는 이유로 '자녀교육·양육 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여가 및 자아성취'(20.4%), '소득고용 불안정'(15.2%), '일·가정 양립 곤란'(12.6%)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성별에 따라 미혼여성은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28.6%), 미혼남성은 '소득이 적어서'(19.8%)라고 응답해 다소 차이가 나타남. 이는 미혼여성은 자녀양육 비용이, 미혼남성에게는 소득부족 및 실업·고용불안정 등의 요인이 소자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미혼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곤란(13.3%)도 미혼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으로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자녀출산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첫 자녀 출산 여건

- 응답자 전체의 첫자녀 출산 여건은 '고용안정'(30.7%), '소득안정'(28.0%), '충분한 부부생활 후'(14.6%) 등의 순임.
- 성별에 따라 미혼여성은 '소득안정'(31.0%)을, 미혼남성은 '고용안정'(39.1%)을 가장 중요한 첫 자녀 출산여건으로 응답해, 남녀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남. 그러나, 미혼남녀 모두 첫 자녀 출산시기로 고용, 소득, 집장만 등 경제적 여건(미혼여성의 62.1%, 미혼남성의 72.3%)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이는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불안은 출산을 미루거나 중단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다. 미혼남녀의 결혼 및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태도

□ 결혼정책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결혼정책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태도(매우+다소 필요함)는 응답자 전체의 80.7%로 나타남.
- 미혼남녀별로 결혼정책 필요성에 관한 긍정적 태도(매우+다소 필요함)는 미혼남성(79.3%)보다 미혼여성(82.2%)이 더 높아, 미혼여성이 결혼정책 필요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출산·양육 지원 요구도

- 전체적으로 양육·교육비 지원(44.4%), 일·가정 양립 지원(25.8%), 주거 지원(20.5%) 등의 순으로 90%이상이 집중되어 나타남.
- 미혼여성은 양육·교육비 지원(46.6%), 일·가정 양립 지원(25.7%), 주거지원(16.5%) 등의 순으로 높았고, 미혼남성은 양육·교육비 지원(42.2%), 일·가정 양립 지원(26.0%), 주거 지원(24.4%) 등의 순으로 높았음.
- 미혼남녀 모두 자녀양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음.

□ 출산·양육 여건에 관한 태도

-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경감(16.5%),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4.1%), 경기 활성화(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혼여성은 사교육비 경감(17.6%),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6.8%), 공교육 강화(11.8%) 등의 순으로 높았고, 미혼남성은 경기활성화(17.8%), 사교육비 경감(15.5%), 공교육 강화(12.4%) 등의 순으로 높았음. 즉, 미혼여성은 '사교육비 경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미혼남성은 '경기 활성화'라고 가장 만렘 응답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남.
- 이는 미혼여성의 경우 직접적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미혼남성의 경우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인 책임감이 결혼과 출산양육에 있어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3. 경기도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동향

가. 기혼여성의 결혼에 관한 태도

□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반드시 해야+하는편)가 70.8%로 전국(62.5%) 조사결과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 연령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하는 편이 좋다'라는 응답은 25~29세(60.0%), 20~24세(57.1%)의 저연령층에서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으며, 반대로'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은 30~34세(1.9%), 35~39세(3.5%), 40~44세(5.4%) 고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남.
- 이는 고연령층 기혼여성일수록 결혼을 아예'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식의 결혼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됨

□ 만혼 및 비혼 이유에 대한 태도

-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기도 기혼여성의 93.2%가'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태도(전적으로+대체로 찬성)를 보임. 이외에도 낮은 소득(91.0%), 집장만 및 결혼비용(84.9%), 결혼보다 일을 중시(8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도 기혼여성들이 최근 비혼화나 만혼화 경향이 실업 및 불안정한 직장 과 낮은소득, 결혼비용 등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결혼보다 일 중시, 배우자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 교육기간 연장 등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에 대해서도 찬성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사회문화적 분위기 또는 가치관 변화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짐작됨.

□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편의 육아참여('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가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편의 생계책임('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도 80.9%로 높은 찬성정도를 나타내, 탈전통적 부부역할(남편의 육아참여)과 전통적 부부역할(남편의 생계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혼여성들 사이에 최근 양성평등 가족문화가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과거 가부장적 가족문화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 기혼여성의 결혼실태

□ 결혼연기 경험 및 이유

-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한 경험은 경기도 기혼여성(4.0%)이 전국 기혼여성(3.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결혼을 연기한 이유는 '실업상태 및 비정규직'이어서라는 응답이 전국(18.4%)에 비해 경기도 기혼여성(35.7%)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결혼비용이 여의치 않아서'라는 응답도 전국(22.1%)에 비해 경기도(26.0%)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즉, 경기도 기혼여성이 결혼을 미뤘던 주된 이유는 실업·고용불안정 및 결혼비용 등의 주로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짐작됨.

□ 결혼식 비용

- 경기도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당시 평균 결혼비용은 1,994만원(표준편차 2,457)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결혼비용 분포는 25~29세(29.2%), 30~34세(24.0%), 35~39세(22.6%) 연령층에서 모두 3,000만원 이상 결혼비용을 쓴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이는 최근 결혼관련 비용(예단 범위의 확대, 혼수물품의 항목 증가 및 고가화 등)의 지출이 늘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됨.

□ 신혼집 마련

- 신혼집 마련과 관련된 실태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66.7%가 전세형태(무월세)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44세가 시대에서 동거한 비율이 13.4%로 높았고, 20~24세는 25.0%가 신혼집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응답함. 이는 시대에 따른 핵가족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결혼기간에 따라, 신혼집을 직접 구입한 경우는 혼인기간 5년 미만인 경우가 15.3%로 나타났고, 전세(무월세) 형태로 신혼집을 마련한 경우는 혼인기간 10~15년 미만이 72.3%로 가장 높았음. 보증부 월세는 20년 이상 혼인기간인 응답자가 20.0%로 높았음.
- 대부분 신혼부부들은 직접 구입보다는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형태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앞서 결혼 연기 이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혼집 마련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이후에도 출산을 연기하는 사례와도 연결되는 부분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혼집 마련은 많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기도 기혼여성의 29.1%가 결혼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대출금액은 2,076만원(표준편차 1,287)로 나타남.
- 즉,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고, 이는 가계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됨.

다. 기혼여성의 출산에 관한 태도

□ 자녀필요성

- 자녀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1%가 긍정적인 태도(반드시+갖는 것이 좋음)를 나타내었으나, 저연령층일수록 찬성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취업 중인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10.4%로 비취업 여성(7.7%)에 비해 자녀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취업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곤란으로 자녀양육에 대해 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향후 출산계획(의향)

- 경기도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인 68.4%가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고, 19.4%만이 출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힘.
-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계획 비율은 낮아져 30~34세(28.8%), 35~44세(11.1%)로 나타남. 또한 현존자녀수가 0명일 때보다 3명 이상 많아지면 연령별로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고연령층이면서 현존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계획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무자녀인 경우에도 고연령층에서 추가 출산계획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늦어질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생리적·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이 커지기 때문으로 짐작됨.

□ 향후 출산계획 자녀수 및 시기

-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80.3%는 1명을 더 낳겠다고 하였고, 2명 이상을 낳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에 불과함. 따라서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경기도 기혼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21명으로 나타남.
- 현재 1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들(1.08명)이 2자녀 여성들(1.21명)에 비해 추가출산 자녀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고, 출산계획 자녀수 비율도 1명이 91.5%로 현저하게 높다는 점은 그 만큼 추가 출산을 하더라도 앞으로 2자녀 정도에서 중단하겠

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 이유

- 향후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기도 기혼여성(20~44세)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25.4%),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20.5%), '소득이 적어서'(11.0%),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8.9%), '나이가 많아서'(8.1%),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4.2%) 등의 순임.
- 현존자녀수별로, 현재 무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현존자녀수에 비해 경제적인 이유(소득부족 및 자녀양육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무자녀'라는 의사결정에 경제적인 문제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도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불임도 중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1자녀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계획한 자녀수를 다 낳았다는 의견도 높아 1자녀 정도로 출산을 중단하려는 경향도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2자녀인 경우, 계획한 자녀수를 다 낳았다는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아, 두 자녀 정도면 적당하다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됨. 또한, 경제적인 이유도 무자녀 및 1자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 출산을 중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 현재 출산한 자녀수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는 자녀수를 합한 기대자녀수는 2명(61.8%)이 가장 많았고, 1명(19.9%), 3명(14.3%), 4명이상(2.2%) 순임. 기대자녀수 평균은 1.96명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자녀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저연령층 여성일수록 1자녀관의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저연령층일수록 평균 기대자녀수가 낮아 향후 저출산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됨.
- 고연령층에서 실제 출생아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지 못하고, 저연령층일수록 기대자녀수와 이상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출산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음.

라.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현실

1) 기혼여성의 가족책임과 경제활동 참여

□ 결혼전후 경력단절 경험

- 결혼 당시 취업 중이었던 경기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전후 경력단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3%가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35~39세(38.8%), 30~34세(38.1%), 40~44세(36.4%) 등의 순임.
- 고연령층일수록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요즘에 비해 과거에는 결혼 후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됨.
- 또한, 30대의 경력단절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결혼 또는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중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결혼전후 경력단절 이유

-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정일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27.5%)가 가장 많았고, '가정에만 전념하고 싶어서'(18.5%), '일하고 싶지 않아서'(13.0%), '힘들어서'(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가정일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 이유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서라고 볼 수 있음.

□ 출산전후 경력단절 수준

-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기간동안 취업 중이었던 경기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순위별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아 출산 전후로는 50.5%가 취업을 '중단'하였고, 둘째아 출산 전후로는 23.8%가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 현재 취업여부별로 출산전후 경력단절 수준은 모든 출생순위에서 공통적으로 현재 취업 중인 기혼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시간을 줄여 일하는 탄력 근무제나 육아휴직 등의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즉,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출산 및 일·가정 양립이 더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자녀가 많을수록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낮아지는 대신, 시간을 줄여 일하는 탄

력근무제나 육아휴직 등을 하는 예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를 출산하는 상황에서는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여성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다고도 볼 수 있음.

□ 출산전후 경력단절 이유

- 출산을 전후로 일을 그만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첫째아 출산을 전후로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44.2%),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19.0%), '직장 해고'(11.4%), '일·가정 양립시간 부족'(7.7%) 등의 순이었으며, 둘째아 출산전후로는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36.8%),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26.4%),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직장 눈치'가 각각 14.7%, '일·가정 양립시간 부족'(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 현재 비취업 여성의 경우에는 49.0%가 첫째아 출산시 일을 그만둔 이유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인 반면, 지금 현재 취업중인 여성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39.0%)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즉, 출산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나 '일·가정 양립시간 부족' 등의 자녀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

□ 취업 기혼여성의 일·가정양립시 힘든 일

-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겪는 힘든 일을 조사한 결과 조사응답자의 38.6%가 '자녀양육 및 대화시간 부족'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함. 이외에도 '일·가사의 병행 어려움'(28.9%), '부부간 함께하는 시간부족'(10.8%), '직장일에 전념 어려움'(4.0%), '직장에서의 차별'(4.0%) 등의 순임.
- 연령별로, 25~29세는 '직장일에 전념하기 어려움'(30.8%)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고, 35~39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녀양육 대화 시간 부족'을 상대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함.
- 결국, 경기도 취업 기혼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일을 하면서 자녀양육 시간 부족 및 일·가사를 같이 병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부간 가정일 분담에 대한 주관적 태도

- 주관적으로 느끼는 남편과 가정일의 공평분담 정도는 전체의 45.9%가 대체로 공평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매우 공평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3.5%로 아주 낮음. '별로

공평하지 않다'(39.5%), '전혀 공평하지 않다'(11.0%)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음.

- 연령별로, 저연령층일수록 남편과 가정일 분담이 매우 공평하다(14.3%)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전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0~44세가 15.5%로 가장 많아, 고연령층일수록 부부간 가정일의 분담이 불공평하다는 주관적 태도가 높게 나타남.
- 저연령층일수록 양성평등 교육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부부간 가사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반면, 고연령층일수록 남편과의 가사일 분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연령층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구분하는 경향이 아직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부간 실제 집안일 분담

- 실제로 남편과 집안일을 분담하는 정도는 '대체로 부인이'(56.9%), '전적으로 부인이'(20.0%) 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반면 '대체로 남편이'한다는 0.4%, '전적으로 남편이'한다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44세 연령층에서 '전적으로 부인이'전담한다는 응답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39세(23.4%), 30~34세(17.3%), 25~29세(4.5%)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실제 집안일 분담 정도에서 남편보다는 부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큼.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전히 가정 내의 일은 여성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

- 남편과의 자녀돌보기 분담 정도는 대체적으로 자녀 돌보기의 5가지 유형 모두에서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부인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음.
- '밥먹고 옷 입히는 것'은 대체로 부인이 45.8%, 전적으로 부인이 27.1%, 부부가 함께 12.3% 등의 순이었으며, '함께 놀아주기'는 대체로 부인이 37.9%, 부부가 함께 32.5%, 전적으로 부인이 11.9% 등의 순이었으며, '아플 때 돌봐주기'는 대체로 부인이 45.8%, 전적으로 부인이 24.6%, 부부가 함께 23.2% 등의 순임. '숙제나 공부 돌봐주기'도 대체로 부인이 48.5%, 전적으로 부인이 23.2%, 부부가 함께 16.4% 등의 순이었으며, '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 등하교'는 대체로 부인이 43.3%, 전적으로 부인이 24.9%, 부부가 함께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자녀돌보기의 대부분을 부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는 부부가 함께 한다는 비율이 32.5%로 높아, 다른 자녀돌보기 유형에 비해 비교적 남편의 분담정도가 높았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참여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태도

□ 출산정책 인지도

- 경기도 기혼여성의 주요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인지도는 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는 경기도민들이 모든 정책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주요 수요자인 기혼여성의 인지율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분야별로, 자녀양육 비용경감(79.4%)이나 보육관련 인프라 확충(62.0%) 등에 대한 저출산 정책 인지도는 높은 반면, 근로형태 유연화(27.3%)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21.9%) 등에 관한 정책인지도는 다른 출산정책들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출산정책 경험도

- 1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 기혼여성의 저출산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경험도는 정책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험도가 가장 높은 출산정책은 산전 진찰비용 지원(17.8%)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15.1%),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8.6%),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8.0%),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6.9%), '출산 크레딧'(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의료 및 자녀양육 비용경감과 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경험도가 높지만, 주거지원과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정책경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특히, 주거지원 영역에서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1.4%)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0.8%)의 경우는 2% 미만으로 아주 낮음. 또한, 정책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양성평등 문화조성과 관련한 정책경험도도 2.7%로 낮은 분포를 보임.

□ 출산정책 만족도

- 1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 기혼여성이 경험했었던 저출산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만족도는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간제 보육·육아시설 확충'(3.26점), '육아휴직 활성화'(3.24점), '출산·육아후 노동시장 복귀지원'(3.19점), '직장보육시설 확충'(3.12점), '산전후휴가'(3.11점), '아동의 방과후 교육 지원'(3.0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한 정책의 만족도 평균은 2.16점으로 다른 정책들에 비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
- 기혼여성들이 정책을 이용하면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항목들은 정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출산정책 선호도

- 본인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사한 결과는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이 5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7.3%), '아동의 방과후 교육지원'(6.5%), '출산·육아후 노동시장복귀지원'(3.9%), '종일제 보육·육아시설 확충'(3.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3.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2.8%), '직장보육시설 확충'(2.7%), '출산 크레딧'(2.6%), '다자녀 가정 소득공제'(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 기혼여성은 자녀보육·교육비 지원 및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특히,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53.9%)이 자녀양육관련 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많이 선호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녀양육에 있어 바람직한 사회여건

- 경기도 기혼여성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여건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시설 확충이 19.8%로 가장 높았으며, '사교육비 경감(16.9%), '공교육 강화'(12.4%), '경기 활성화'와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이 각각 12.3% 순으로 높았음.
- 출산·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전국 응답자는 사교육비 경감(22.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경기도 기혼여성은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9.8%)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해 전국에 비해 다소 차이가 나타남.
- 이는 경기도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과 같은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면접조사 결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미약하며 고용불안정과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나타났음. 그 외 불임과 유산으로 인한 건강 요인 또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 대책이 우선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일가족 양립 부담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제도, 가치관 변화, 불임 및 임신 지원 등의 대책이 제시되었음.

제4장 경기도 저출산 대응방안

1.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

가. 경기도 저출산 대책의 성과와 한계

- 경기도 저출산 대책의 성과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사업”, “가정보육교사제도”, “꿈나무안심학교” 등의 도 자체 특색사업을 들 수 있으며, 2010년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추진 및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대부분 각 관련 부서의 사업들을 지속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의 저출산 대책으로 평가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된 측면이 높아 실질적인 출산률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위기의식 부족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복지적 접근에 따른 출산제고 효과 미흡
 - 핵심정책의 부재로 인한 도민의 낮은 정책체감도
 - 복합적인 저출산 원인 해결을 위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저출산 대책들 간의 우선순위 선정 미흡과 대책들 간의 상호연계성 부족

나. 경기도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향

- 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가 이뤄져야 함
-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함.
- 셋째 자녀 이상 중심의 다자녀 가구 저출산 대책을 둘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실시하여야 함.
- 출산과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도민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내 다양한 지원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양성평등 환경의 개선을 위해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해나가야 함.

2. 저출산대책의 세부방안

〈표 1〉 저출산대책의 세부방안

정책과제	세부사업
저출산대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 저출산 대응 조례 수정·보완 2) 결혼 및 출산 관련 기초자료 구축 3) 저출산대책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 4) 출산장려 정책 평가 모델 개발 및 시행 5) 저출산 대책 기금 마련 6) 저출산 정책 담당부서 기능강화
결혼·임신·출산 지원 강화	1) 결혼지원센터 설치·운영 2) 결혼준비자금 지원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제도 마련 3) 임신 및 불임부부 지원 확대 4) 원스톱 출산지원서비스 제공 5)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확대 6) 다자녀가구를 위한 유공자 대우 지원
양육친화적 지원 환경 강화	1) 어린이 보험 가입 지원 2) 인터넷교육방송국 운영 3) 초중고생 대상 대학생 가정교사제도 도입 4) 육아지원서비스 통합망 구축
일·가족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1) 공공부문 탄력근무제 도입 및 모성보호제도 실효성 확보 2)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3) 대학 연계 저출산 및 결혼 관련 강좌 개설 4) 저출산 대책 포럼 운영